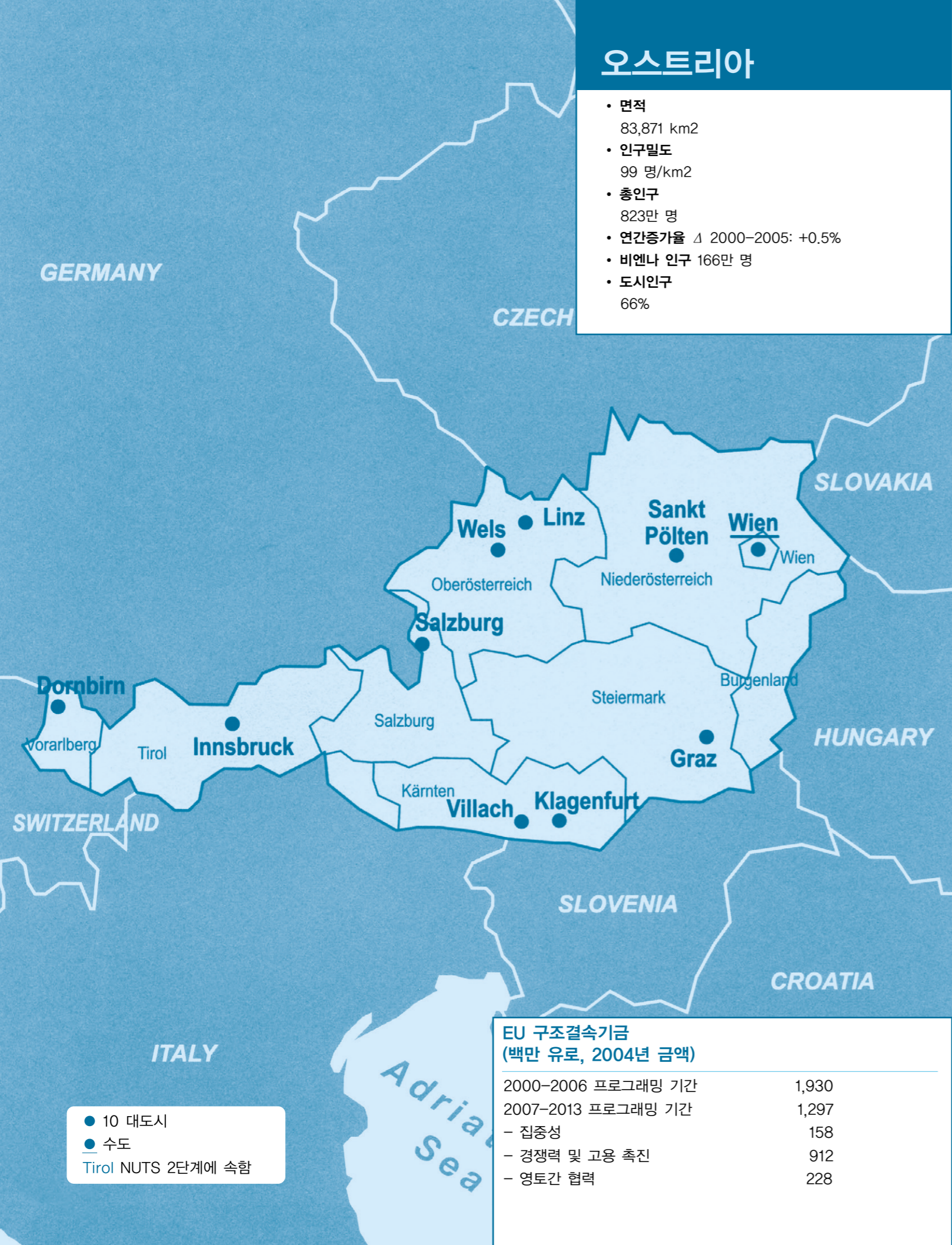


국가 연구

- 오스트리아
- 벨기에
- 덴마크
- 핀란드
- 프랑스
- 독일
- 이탈리아
- 네덜란드
- 스웨덴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

- 면적
83,871 km2
- 인구밀도
99 명/km2
- 총인구
823만 명
- 연간증가율 ▲ 2000-2005: +0.5%
- 비엔나 인구 166만 명
- 도시인구
66%

CZECH

SLOVAKIA

HUNGARY

SLOVENIA

CROATIA

EU 구조결속기금 (백만 유로, 2004년 금액)

2000-2006 프로그래밍 기간	1,930
2007-2013 프로그래밍 기간	1,297
- 집중성	158
- 경쟁력 및 고용 촉진	912
- 영토간 협력	228

- 10 대도시
- 수도
- Tirol NUTS 2단계에 속함

일반자료

■ 국가 조직

- 연방국가. 헌법은 1920년 10월 1일에 비준되었다. 연방국(Bundeslander)의 자치권은 제2조에 명시되어 있다. 제1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다.
- 오스트리아는 1987년 9월 23일에 지방자치정부의 유럽 헌장을 비준했다.
- 의원내각제 :
 - 양원제. 하원(Nationalrat)은 보통 및 직접선거에 의해 매 4년마다 선출된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선거는 2006년 10월에 있었던 선거였다.
 - 상원(Bundesrat)은 연방국을 대표하며, 각 주 의원들의 수는 그 주의 인구 수에 비례한다.
 - 연방대통령은 임기 6년으로 보통 및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선거는 2004년에 있었던 선거였다.
 - 연방정부(Bund- www.austria.gv.at)는 연방수상(Federal Chancellor)이 이끌며 13명의 연방장관으로 구성되어 있다(2006년 10월 현재). 지방정부를 담당하는 부서는 내무부(the Ministry of Interior) (www.bmi.gv.at)이다.

■ 영토 단계의 제도적 조직

오스트리아는 비교적 작은 국가로서 EU 전체 영토의 1.9%(14위)와 전체 인구의 1.7%(15위)를 차지하고 있다.

해당 영토를 담당하는 중앙정부의 영토행정 단위부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스트리아는 2단계의 지방 자치정부를 지니고 있다. 9개의 연방국(Bundeslander)은 보통 도(Provinces)와 2,357개의 자치단체(Gemeinden)로 칭하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인 랜더(Länder)의 행정구역은 구역지사(District Governor)가 이끌고 있는 여러 구역(Bezirke)으로 나누어진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여러 가지 명칭과 법령을 보유하고 있다. 15개의 법정도시(Statutarstädte)들과 197개의 소도시(Stadtgemeinden), 755개의 시장(Marktgemeinden) 및 1,390개의 마을(Dorfer)이 있다. 수도인 비엔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의 자격을 동시에 가지는 특별한 지위에 있다. ¹

1. 따라서 비엔나는 주와 자치단체의 총계 양쪽에 다 포함된다.

중앙 국가 영토 관리

지방 정부
연방 단계

9개 주
(Bundesländer)

지방 정부

2,357개 지방자치단체
(Gemeinden)

■ 지방 정부 협회

지방자치단체들은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2개의 지방자치협회가 대표하고 있다.

- 오스트리아 지방자치협회(Osterreichischer Gemeindebund)는 2,344명의 회원들과 오스트리아 인구의 70%를 대표하고 있다.
www.gemeindebund.at;
- 오스트리아 시 협회(Osterreichischer Städtebund)는 2007년 현재 247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www.staedtebund.at.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의 측면에서 볼 때 회원가입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이 두 협회는 지방자치단체인 랜더(Länder)와 중앙 국가 간의 세입분배법(Finanzausgleich) 협상에서 자체 회원들을 대표하고 있다.

출처 :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

* 거시경제자료(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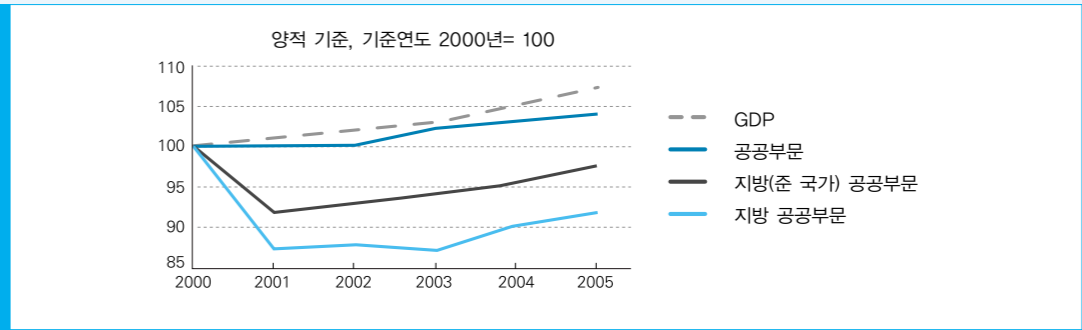
	오스트리아	EU 27개국	EU 27개국 중 순위
GDP			내림차순
백만 유로	245,330	10,990,743	9위
1인당(유로)	29,798	22,344	8위
2004-2005 변화	+2.0%	+1.8%	20위
기타 지표			오름차순
실업률(%)	5.2	8.7	6위
인플레이션 비율(%)	2.1	2.3	9위
통화	2005 환율	유로화 채택	
Euro	-	2002년 1월 1일	

* 주요 재정지표(2005년)

	백만 유로	GDP %	공공부문 %	Δ2000-2005*
지출				
공공부문	122,367	49.9	-	+0.8%
지방 공공부문	42,554	17.3	34.8	-0.5%
GFCF				
공공부문	2,735	1.1	-	-4.2%
지방 공공부문	1,966	0.8	71.9	-3.9%
세입				
공공부문	118,244	48.2	-	+0.8%
지방 공공부문	43,308	17.7	36.6	-0.4%
예산수지				
공공부문	-3,866	-1.6	-	-
지방 공공부문	754	0.3	-	-
부채				
공공부문	155,563	63.4	-	+0.7%
지방 공공부문	12,159	5.0	7.8	+0.6%

*양적 기준 연평균 성장

* 2000 - 2005 공공지출 변화



EU 구조결속기금

■ 프로그래밍 기간 2000-2006

오스트리아는 EU 기금으로부터 19억 3천만 유로, 즉 1인당 234 유로를 받을 권리가 있다(2004년 가치). EU 기금은 목표 1(가장 유복하지 못한 지역인 Burgenland에 배당되는 기금의 15%), 목표 2(37%), 목표 3 및 지역사회 계획 등에 따라 제공되었다. 2006년 말, 오스트리아는 그 할당금액의 79%를 집행함으로써 구조기금을 효율적으로 흡수해 왔으며, EU 27개국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하였다. 1995년부터 2006년 중반에 이르기까지 ERDF는 대략 23,000개의 프로젝트를 후원했으며, 약 40,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 프로그래밍 기간 2007-2013

이른바 “STRAT.AT”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전략적 기준 프레임워크(The Austrian Strategic Reference Framework)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특정 우선과제가 있다.

- 혁신 및 지식기반 경제
- 매력적인 지역 및 경쟁력 있는(비즈니스) 현장
- 노동력의 자격요건의 구비 및 적응성

이 목표들을 관리하기 위해 오스트리아에는 13억 유로가 할당되었는데, 이는 1인당 158 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과 비교할 때 약 30%가량 감소한 액수이다. 기금은 연간 GDP의 0.08%를 차지한다(2004년 가치).

이 기금은 11개의 운용 프로그램(OPs)을 통해 사용되게 된다.

- 임시지원의 형태로 부르크렌트(Burgenland)에 배당된 집중적 목표에 따른 1개 지역운용 프로그램(기금의 12%)(단계적 폐지).
- 연구개발센터, SME 네트워크, 에너지 및 생태기술 혁신, 비즈니스 현장개발 및 노동력의 적응성 등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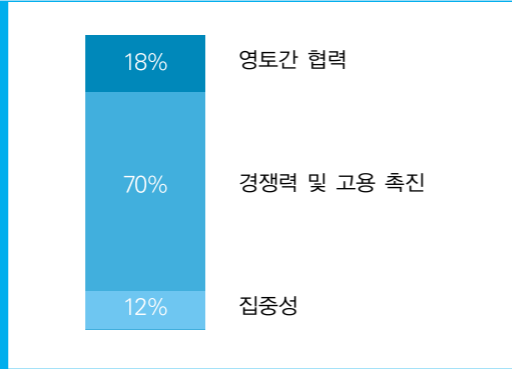
함으로써 나머지 8개의 랜더(Länder)에 도움이 될 8개의 지역 운용프로그램의 경쟁력 및 고용 촉진목표(기금의 70%)

- 고용 증진을 위한 1개의 수평적 운용프로그램.

EU 기금의 18%가 영토협력목표에 배당된다.

오스트리아의 연방구조로 인해, 랜더(Länder)는 지역기관들의 지원으로 지역정책의 설계와 관리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71년에 Bund, 랜더(Länder) 및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해 지역계획을 국가적 단계에서 조정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오스트리아 지역계획회의(Osterreichische Raumordnungskonferenz, OROK)

* 목표 별 EU 기금의 명세



추가 정보

- 연방수상(Federal Chancellery)-오스트리아-지역계획 및 지역정책부문 :
- 오스트리아 지역계획회의(OROK) :

지방조직 현황

1. 지방 정부 단계

오스트리아는 연방단계와 지방단계로 구성된 2개의 지방 정부단계를 보유하고 있다.

연방단계는 9개의 연방국(Bundeslander, 랜더(Länder)라고도 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스트리아 영토의 연방조직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지니고 있

다. 주정부는 1848년에 최초로 수립이 되었으며, 1918년에 완전한 입법권을 확보했다. 오늘날, 여러 주들은 통치권으로부터 일정한 혜택을 받고 있으며, 각 주는 자체적인 집행권과 입법권뿐만 아니라 자체 행정기관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권 전체는 국가적인 단계에서 볼 때 분권화되어 있다. 랜더(Länder)는 구역(Bezirke)이라고 하는 행정단위로 분화되어 있다.

* 오스트리아 여러 주에 관한 핵심 정보(2005년)

	인구	면적	GDP	지방자치단체
	주민 수	Km2	1인당 유로	수
부르크렌트(Burgenland)	278,660	3,965	20,100	171
카린시아(Carinthia)	560,090	9,536	24,400	132
남부 오스트리아	1,575,290	19,178	23,400	573
북부 오스트리아	1,399,230	11,982	27,000	444
잘츠부르크(Salzburg)	526,870	7,514	31,800	119
스티리아(Styria)	1,199,490	16,392	24,800	542
티롤(Tyrol)	693,650	12,648	29,500	279
포라베르크(Voralberg)	362,260	2,601	30,100	96
비엔나(Vienna)	1,637,770	415	40,300	1
전국 평균	914,800	9,319	28,800	294*

* 비엔나 제외 - 출처 : 오스트리아 통계(Statistik Austria)

이 주들의 평균인구는 대략 915,000명으로서, 부르겐란트(Burgenland)의 279,000명에서 비엔나(전국 인구의 20%)의 거의 170만 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지방정부의 단계에서 볼 때, 2,357개의 지방자치단체(Gemeinden)들이 있다. 2007년 이 지방자치단체에는 15개의 법정도시(Statutarstädte), 197개의 소도시(Stadtgemeinden), 755개의 시장(Marktgemeinden) 및 1,390개의 마을(Dorfer)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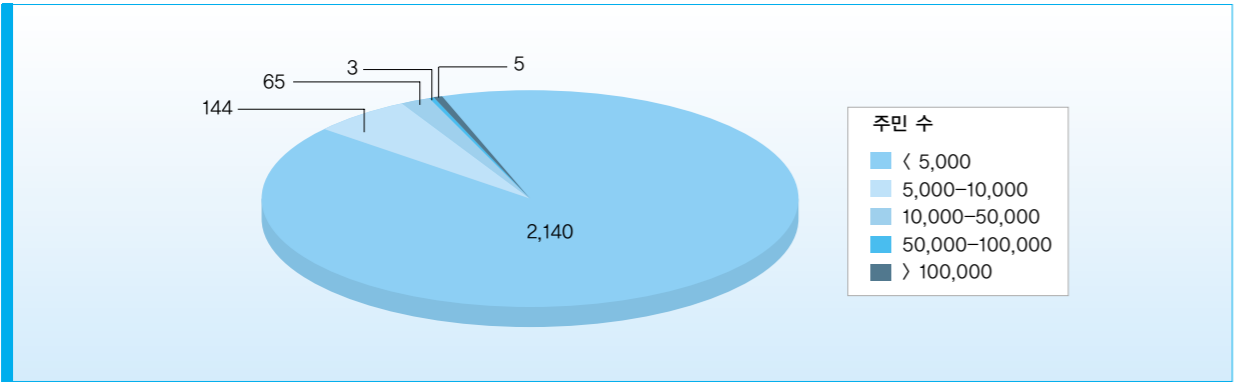
15개의 법정도시만이 특별한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큰 도시(어떤 한 도시가 20,000명 이상의 주민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특별한 지위를 요청할 수 있다.)로서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자체 주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들이며, 이는 자체적인

현장과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구조를 분명하게 확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들과 비교해 볼 때 그 주요한 차이점은 이들 역시 행정구역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시장은, 선출된 지방정부와 연방국 영토행정부 양 단계의 수반이 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다. 평균 인구 수는 3,510명이며, 90% 이상이 인구 수가 5,000명이 채 되지 않는 반면, 비엔나, 그라츠(Graz), 린즈(Linz), 잘츠부르크(Salzburg), 인스부르크(Innsbruck) 등 5개의 도시들만이 100,000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수도인 비엔나는 170만 명(대도시 지역의 단계에서 볼 때 거의 2백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이다. 비엔나는 연방국가이자 법정도시이

* 인구규모에 따른 2,357개 지자체 내역(2005년)



* 분권화에 관한 최근 수정사항 및 영토 재편성

1970년대에는 영토 개혁이 시행되었다. 1950년대 이후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숫자는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현재는 3,999개에서 2,357개로 줄어들었다. 예를 들면, 남부 오스트리아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를 1,652개에서 573개로 줄였으며, 최근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병합은 그리 자주 있는 일이 아니어서 2005년과 2007년 사이에는 단 2건의 자치단체 병합만이 기록된 바 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 오스트리아 협약

(Verfassungskonvent)을 통해 광범위한 헌법 개혁이 시행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기타 사항의 경우, 재정 분권화,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부채와 세입을 조화롭게 하고 지방 당국이 자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수단을 확실하게 보유하도록 하기 위한 연계성 원칙의 강화가 요구되었다. 지방 관할지역의 재편성뿐만 아니라 복잡한 연방체계를 단순화하는 작업도 구상이 되었었지만, 이 협약은 아무런 중요한 협정도 체결하지 못한 채 2005년에 종결되었다.

지만 수도로서 특별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도시는 다른 32개의 지방자치단체들로 구성된 지역인 남부 오스트리아 지역(the Lower Austria Land)의 핵심이다.

이 도시는 소도시 지역(Stadtregion)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지방자치협의회는 주 의회(the State Parliament)이기도 한 반면, 소도시 상원은 주 정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시장은 주지사(State governor)역할을 하기도 한다. 비엔나는 23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연방국

각 주의 심의기관은 자체 의회(Landtag)이며, 소속 의원은 비례대표제에 따라 보통 및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각 의회는 비례시스템을 통해 공동집행기관인 주정부(Landesregierung)를 선출한다. 집행기관은 반드시 주 정부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는 주지사(Landeshauptmann)가 이끈다. 주지사는 주 행정부를 이끄는 주 정부의 최고책임자이다. 선거는 매 6년마다 치러지는 북부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매 5년마다 치러진다. 다음 선거는 각 란트(Land)별로 2008년과 2010년 사이에 치러지기로 예정되어 있다.

랜더(Länder)는 구역(Bezirke)이라고 하는 하위 행정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99개가 있다.²이 행정기관(Bezirkshauptmannschaft)은 개별 주 정부가 임명

2. 지방 정부 정치 제도

⌘ 지방 정부 정치단체

2. 이 99개의 구역들은 "일반 구역(normal districts)" 또는 "농촌 구역(country districts)"이다. 또한 15개의 법정 도시에는 "도시 구역(urban districts)"도 있다. 비엔나 역시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는 구역장(Bezirkshauptmann)이 수반이 된다. 구역은 연방과 주 행정법률의 모든 사안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오스트리아의 일반 행정의 기초 단위이다. 대체로 이 구역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당국이기도 하다. 15개의 법정도시에서, 도시 구역은 통상적인 구역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 자치단체

각 주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결정하고 지방당국과 관련된 여러 규정을 통과시키는데, 이는 지방자치정부에 관한 입법이 반드시 모든 주에서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각 란트(Land)는 자체적인 고유한 지방정부법(Gemeindeordnung)과 지방선거를 다루는 여러 가지 법(Gemeindegewahlordnung)을 제정해 왔는데, 이 양자 모두 오스트리아의 헌법상의 법 조항,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제115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심의기관은 지방자치단체 협의회(Gemeinderat)이다. 그 회원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와 주의 입법내용에 따라 다르다. 주에 따라 회원들이 5년 내지 6년의 기간을 두고 다른 시기에 선출된다.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는 여러 위원회들의 지원을 받는 비르게마이스터(Bürgermeister)라고 하는 시장이 이끌게 된다. 결정은 협의회 회원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내린다.

법정도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상원(Stadtrat)이라

고 알려져 있는 공동협의회(Gemeindevorstand)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다. 이는 시장이 수반이며, 자체 회원들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평의원들이 지명하고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되는 몇 명의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회원들(지방자치단체 협의회는 규모에 따라 3명에서 12명 사이)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협의회는 협의회 결정사항을 작성하여 실행하고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책임에 대한 명세는 주마다 다를 수 있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행정부의 수반이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와 세입을 인가한다. 시장이 임명되는 방식은 주 입법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의 경우 시장은, 보통선거 및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이런 방식이 점차로 많이 채택되고 있는 임명방식이다. 법정 도시에서는 선출된 시장이 연방국가의 영토행정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 지방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적인 책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지방 총선거를 개최할 수 있다. 주에 따라 총선거를 치르는 조건은 받기인이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공동 협의회, 시장 또는 등록된 유권자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시민들은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 계획된 프로젝트나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수적으로 충분하다면 채택을 위한 문서, 법령의 취소,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결의, 또는 단순히 행정적인 조치 등을 제안할 수 있다. 일부

주들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른 형태도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부 주에서는 특정 수의 유권자들이 요청하는 경우,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교환 미팅을 주선할 수도 있다.

3. 지방정부의 책임

⌘ 관할 지역

다양한 지방 단계 중에서 책임의 배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은 보완성의 원칙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과제가 그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수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각 주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적인 책임에서 비롯되는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중앙국가가 위임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적인 개별 란트(Land)가 위임하는 업무도 처리할 책임이 있다.

○○● 연방국

오스트리아 헌법 일반 조항 제15(1)조에 따르면, 중앙국가의 단계에 명시적으로 귀속되지 않은 모든 입법 및 집행권은 연방국의 관할에 해당한다. 하지만 중앙국가 단계에서는 공공 치안, 조세, 민법 및 형법, 산업

관련 업무, 교육, 건강 보호 등과 같이 가장 중요한 입법과 집행권에 대한 책임이 남아 있게 된다. 각 주들이 독점하고 있는 주요한 책임에는 농업, 스포츠, 환경, 관광, 일반적인 지역계획, 응급 서비스, 지방 경찰 및 건축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각 주들은 자체적인 지방 당국의 조직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고 있다.

게다가 각 주들은 자체적인 고유 권한을 통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부(헌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연방법률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간접적인 연방행정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기타 항목들 중에서 경찰, 병원, 농촌공급,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도로교통, 사회복지, 주택건설 및 도시개발 등과 같은 분야에 상응하는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들은 고유한 자체 책임(eigener Wirkungsbereich)과 중앙국가나 자체 주(übertragener Wirkungsbereich)가 위임한 책임을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책임에는 헌법에 명시된 사항뿐만 아니라 각 주의 법률에 정의된 지방의 이익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책임에는 건강(지방자치단체 병원) 및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경찰, 도시 및 토지계획, 운송, 환경보호, 용수공급, 하수도 및 가정 폐기물의 수집, 초등학교

3. 지방자치단체들은 사회적 보호의 약 50%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 란트(Länder)는 나머지 50%의 재정을 조달하며 조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약정내용은 각 주마다 다르다.

와 직업학교의 건설 및 유지 등이 포함된다.³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될 때면 언제든지 자체 책임의 일부를 주에 이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임된 책임에는 주민등록제도, 선거조직, 건강에 관련된 조치 등이 포함된다.

또한 중앙국가, 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을 공유하는 경우가 흔하다. 예를 들면, 교육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사항인 초등학교는 중앙국가, 주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조달할 수 있는 반면 란트(Land)가 고용하는 교사들은 항상 중앙국가가 봉급을 지급한다.

☞ 지방 공공서비스 관리

지방 공공서비스는 흔히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기관들이 관리한다. (Regiebetriebene Eigenbetriebe) 또는 지방자치단체간 조직.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의 공공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 공공기업(kommunale Betriebe)을 세울 수도 있다. 이들은 기업법률의 구속을 받는 민간법률 기업체들로서 주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이들의 수도는 완전히 공적이거나 혼합된 형태가 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보통 지방 정부가 전부 소유하는 (100%) 형태이다.

수도, 하수도 및 폐기물 관리는 주로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기업의 형태로 제공된다. 게다가 지방자치단

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운송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기업이나 순수한 민간기업의 자격으로 설립된다. 에너지업무는 주로 민간기업들이 수행한다. 추정치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에는 800개에 달하는 완전한 민간기업과 1,000개에 달하는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기업 외에도 약 1,200개의 지방 공공기업들이 존재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헌법(제116조 a B-VG)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부 자체적인 공동 책임을 관리하기 위해 협정이나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간 조직 (Gemeindeverbände)을 구성하도록 협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간 조직을 창설(또는 그 중 하나에 대한 참여)하려면 중앙국가나 주가 위임한 책임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2005년 현재 오스트리아에는 1,413개의 지방자치단체간 조직이 존재했었다. 이 조직의 32%가 학교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28%는 환경업무를, 7%는 용수공급부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4%는 건강 서비스, 3%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기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 지방정부 법률의 통제

☞ 법적 통제

주의 결정과 입법활동에 대한 법적 통제는 각 주의 회가 행사한다. 지역의 헌법상 법률은 국가의 헌법상 법률에 종속되어 있으며 이것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요청이 있고 연방의회(Bundesrat)의 승인이 있으면 대통령은 주의 회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

중앙 국가와 각 주들은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감독권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감독당국인 구역행정기관(Bezirkshauptmannschaft)을 통해 활동한다.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결정은 어떤 것이든 취소가 가능하다. 반복되는 위법행위에는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의 해산을 포함하여 무거운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통제 권한결정에 대해 행정 고등법원(the administrative High Court)과 대법원(the Supreme Constitutional Court)에 항소할 수 있다.

☞ 예산 및 재정 통제

각 주들은 이들이 존재하는 경우 오스트리아 감사법원(Rechnungshof) 및 도 감사법원에 의한 경우는 Landesrechnungshof)의 통제를 받는다.

지방자치단체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예산 및 재정

통제조치는 상당부분 각 주의 입법내용에 좌우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반적으로 각 란트(Land) 내의 통제당국(Gemeindeaufsicht)의 감사를 받는다. 통제당국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이 경제, 효율 및 기회 등의 기준을 존중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통제기관의 결론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는 시장에게 보내진다.

인구 20,000명 이상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 정부를 통제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감사법원(Rechnungshof, 게다가 비엔나, 잘츠부르크, 그라츠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 감사법원(Kontrollämter)을 세웠다.)의 통제를 받기도 한다.

II 지방공공부문 지출

● 2005년, 오스트리아의 지방 공공부문⁴ 경비의 총계는 426억 유로(1인당 5,170 유로), 즉 GDP의 17.3%이며 오스트리아의 총 공공경비의 34.8%에 달했다.

여러 주들(비엔나 제외)은 지방 공공부문경비 총계의 54%에 공헌한 반면, 지방자치단체들(비엔나 포함)은 46%의 공헌도를 보였다.⁵ 비엔나의 경비는 자체의 특별법령뿐만 아니라 인구 규모로 인해 지방 공공 경비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현행의 지방 경비는 374억 유로에 달하는 바, 이는 지방 경비의 88%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사회적 이익과 이전이 지방 경비의 중요한 항목이다(총 경비의 약 55%). 직원 인건비는 총 경비의 대략 1/4로서 여러 주들과 지역 부분에서 동일한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2004년도 말 현재, 오스트리아의 여러 주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약 250,900명(주 행정부에서는 180,000명), 즉 전체 공무원의 65%를 고용했다. 이 주들은 세 가지 전체 정부 단계의 정부기관들 중 가장 큰 부분

※ 지방 공공부문 지출(2005년)

	지방 공공부문 (비엔나 포함)		연방국		총계	
	백만 유로	%	백만 유로	%	백만 유로	%
경상 지출	16,841	86.3	20,575	89.3	37,448	88.0
– 이 중 인건비	4,596	23.6	5,881	25.5	10,477	24.6
자본 지출	2,673	13.7	2,465	10.7	5,106	12.0
총계	19,514	100.0	23,040	100.0	42,554	100.0

출처 : 유럽연합통계청 집계

을 고용하고 있다. 자본 지출은 전체 경비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는 지방부문이 더 많이 관련이 되어 있어서 투자가 자체 총 경비의 거의 14%와 지방 공공투자의 52%를 나타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투자활동은 주로 수도, 하수도 등의 공공 서

지방공공부문과 주들이 분담했다(후자가 조금 더 부담). 사회적 원조(Sozialhilfe)의 재정조달은 각 주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균등하게 분담했으며 더 이상 실업보험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할당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장애자와 노인에게 지원

※ 경제기능별 지방공공부문 지출*(2005년)

	지방 공공부문 (비엔나 포함)		연방국		총계	
	백만 유로	%	백만 유로	%	백만 유로	%
사회보호	4,086	21.0	4,802	20.8	8,888	20.9
보건	3,221	16.6	5,201	22.6	8,422	19.8
교육	3,209	16.5	4,408	19.1	7,617	17.9
경제업무	2,791	14.3	4,249	18.4	7,040	16.6
일반 공공 서비스	3,202	16.5	2,803	12.2	6,005	14.1
여가, 문화 및 종교	1,409	7.2	524	2.3	1,933	4.6
주택 및 지역사회 편의시설	579	3.0	669	2.9	1,248	3.0
환경 보호	522	2.7	217	0.9	738	1.7
공공질서 및 안전	432	2.2	182	0.8	614	1.4
방위	0	0	0	0.0	0	0.0
총계	19,451	100.0	23,054	100.0	42,505	100.0

* COFOG 분류에 기초함 – 통합 자료가 아님 – 출처 : 유럽통계청(Eurostat)

비스에서 수행이 되고 있다(지방자치단체 투자경비의 54%). 이 리스트의 2위는 도로와 교통이 차지하고 있다(22%).

사회적 보호는 지방 공공부문 지출(21%)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2005년에 89억 유로에 달하는 부담을

을 제공하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나 사회적 원조기구(Sozialhilfeverbände)들이 양로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지방 공공부문은 건강관리를 위해 84억 유로를 제공했으며, 이는 총 경비의 20%를 차지했다. 그 중 가장

4. 지방 공공부문에는 지방당국협회(S1313)를 포함하여 8개 연방국(S1312)의 행정당국뿐만 아니라 모든 헌법기관과 부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비엔나는 S1313 부문에 따라 분류된다. 전체 비 시장 공익 서비스 생산자들도 포함된다. 자료가 지방공공부문에 대해서는 통합이 되지만 연방국가들과 그들의 지방정부들 간에는 통합이 되지 않는다.

5. 비엔나는 하나의 도시이자 주이기 때문에, 주로서 집행하는 경비와 지방정부로서 집행하는 경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 원천에 따라 자치단체 경비나 주 경비에 포함된다.

큰 부분은 병원을 담당하고 있는 각 주들이 공헌을 했다. 각 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강기금은 사회보험, 각 주 자체 및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자체 예산을 확보한다. 각 주들은 또한 특정한 경우 장기적인 노인 보호를 담당할 수도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 병원을 소유할 수도 있다(이를 위해 2005년에는 자금조달에 대략 6억 6천 5백만 유로를 제공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병원들을 각 주로 옮기려는 추세를 보일 수도 있다. 인구추이를 보면 각 주와 지방자치단체들 모두에게 건강과 장기적인 보호에 관해 추가 경비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교육은 76억 유로에 달하는 지방 공공부문 지출(18%)를 흡수하고 있다. 각 주들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직원의 봉급과 직업학교의 건축 및 건물 유지보수비용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지출에 대해서는 100%(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까지, 그리고 직업학교의 경우에는 50%까지 이전을 통해 중

앙국가가 다시금 재정을 조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건축과 유지보수 및 교사를 제외한 직원의 봉급에 대한 지급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특히 각 주들의 경우에 경제업무 또한 중요한 부담항목(17%)이 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2005년에 각 주들이 도로 투자를 늘렸기 때문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모두 장기요양시설, 공공 운송 및 탁아소 등에 대한 투자경비가 더 높아지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 분행정 개혁 II

공공재정의 질적 개선에 대한 실질적 공헌이 지속되고 있는 행정개혁 II 속에 예상되고 있다. 다양한 단계의 정부 대표들이 전체적인 정부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출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비용의 역학관계에 대해 제동을 거는데 동의했다. 따라서 2005년과 2010년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지출이 줄어들 예정이다. 이러한 절감노력에는 연방국가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8억 4천 4백만 유로(5,760개의 상근 일자리)에 달하는 직원경

비의 감축과 지방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3억 4천 2백만 유로(3,757개의 상근 일자리)에 달하는 직원경비의 감축이 포함된다. 행정경비도 교육 및 건강 부문에서 축소될 예정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전자적인 정부절차와 공공조달 간의 협력증진을 통해 절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III 지방공공부문 수입(차입을 제외한 수입)

- 2005년의 지방 공공부문 세입은 433억 유로에 달했으며, GDP의 17.7%와 총 공공부문 세입의 36.6%를 차지했다.
- 오스트리아 회계시스템의 중요한 한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중앙국가와 지방 정부들 간에 존재하는 상대적으로 융통성이 없는 재정적 유대관계라고 할 수 있다.

지방 정부 세입만(지방자치단체와 국가) 해도 같은 해에 413억 유로에 달했다. 이 세입의 30%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징수한 것이며(비엔나 제외), 48%는 국가

이 후자들은 자체 세입에 대해 자유재량권이 거의 없다. : 이들의 자체재원세입은 거의 없으며(2005

※ 지방 정부 세입(2005년)

	지방자치단체		비엔나		주		총계	
	백만 유로	%	백만 유로	%	백만 유로	%	백만 유로	%
세수	6,604	52.1	4,060	45.3	6,809	34.6	17,473	42.3
– 자체재원세	2,412	19.0	937	10.4	421	2.1	3,771	9.1
– 배분세	4,192	33.1	3,112	34.8	6,388	32.5	13,702	33.2
보조금	1,957	15.5	2,777	31.0	8,605	43.8	13,339	32.3
기타	4,103	32.4	2,131	23.8	4,247	21.6	10,481	25.4
– 자산 매각	427	3.4	48	0.5	187	1.0	663	1.6
– 수수료	1,369	10.8	464	5.2	0	0	1,833	4.4
총계	12,664	100.0	8,968	100.0	19,661	100.0	41,293	100.0

통합 자료가 아님. – 출처 : 오스트리아 통계청(Statistik Austria)

가(비엔나 제외) 징수하고 22%는 수도에서 징수한 것이다.⁶

년 총 수령액의 9%), 대부분의 세입(66%)을 배분세와 보조금으로부터 받고 있다. 이는 특히 자체재

6. 비엔나는 이중적 지위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로서 세입을 받고 있다.

원세(2%)가 사실상 없고, 보조금과 배분세가 자체 총 세입의 76%를 차지하는 연방국(비엔나 제외)의 경우에 그러하다. 지방자치단체들(비엔나 제외)은 같은 해에 자체 세입 중 19%를 자체재원세로부터 확보한 반면, 보조금과 배분세는 자체 세입 중 49%를 차지했다.

2004년에는 오스트리아의 다양한 단계의 정부가 2005년부터 2008년의 기간 동안 새로운 세입공유시스템(Finanzausgleich)에 동의했다. 이 계획에는 14종의 공유세금(세입 배분의 핵심과 기준)에 대한 세금 공유의 규칙과 공유된 세금 사이의 중앙국가, 주 및 지방자치단체들 간 이전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각 주는 수령액의 15.191%를 주요 공유세금으로부터 받는다.

지방자치단체들은 11.605%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나머지는 중앙국가가 보유한다. 따라서 2005년에는 공유세금 세입의 약 74%가 연방정부에게 배당되고, 각 주는 9%, 비엔나는 약 6%,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약 11%를 받는다.

1. 연방국

각 주들(비엔나 제외)은 2005년에 197억 유로의 세입을 확보했다. 이 중 35%는 자체적인 조세와 대부분 배분세에서 비롯된 것이며, 거의 44%는 보조금이다.

1-1. 세입

2005년에는 각 주들(비엔나 제외)이 68억 유로의 조세세입을 받았다. 그 중 약 15억 유로가 연방국가로서의 책임원수를 위한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비엔나에 추가로 배당되었다.

⌘ 자체재원세입

자체재원세는 각 주들의 경우에는 미소하여 해당 재원으로부터의 세입은 2% 정도이다. 각 주의 자체재원세의 예로서는 행정세(Landesverwaltungsabgabe)와 화재방지세(Feuerschutzsteuer), 사냥 및 수렵세(Jagd-und Fischereiabgabe) 등이 있다.

⌘ 배분세입

각 주들은 거의 모든 자체 세입(94%)을 배분세를 통해 받고 있다. 수령액에 근거를 두고 있는 주요한 배분세는 부가가치세(Umsatzsteuer, 2005년에 27억 유로), 임금세(Lohnsteuer, 25억 유로), 법인세(Körperschaftsteuer, 6억 7천 1백만 유로), 유류세(Mineralölsteuer, 5억 4천 1백만 유로⁷⁾와 소득세(Einkommenssteuer) 등이 있다.

또한 맥주, 자동차, 담배 등에 부과되는 배분세도 있다. 각 주들은 이 세금들 중 15.19%를 받고 있다. 광고세(Werbeabgabe, 8백 8십만 유로)는 각 주들이 그 수령액의 9.083%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외이다.

각 주에 할당된 금액은 두 가지 주요한 기준인 지역 조세세입(특정 세금의 지역세입에 근거한 할당액)과 인구 요소(해당 주의 인구수에 근거한 할당액)에 따라 결정된다.

1-2. 보조금

각 주(비엔나 제외)는 2005년에 자체 지방자치단체들뿐만 아니라 중앙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에서 86억 유로(자체 세입의 44%)를 받았다.

헌법상의 재정법률(Finanz-Veifassungsgesetz)은 일반 보조금(Schliisselzuweisungen)과 특별 보조금(Zweckzuschüsse)으로 구분하고 있다.

⌘ 일반 보조금

일반 보조금은 1인당 배분세입 간의 편차를 고르게 하기 위해 각 주에 할당된다(균등화 매커니즘). 어떤 주의 1인당 배분세입이 주 전체의 평균 배분세입보다 낮은 경우, 이는 두 가지 할당액(2005년도 제정 오스트리아 세입공유법 제20조 1항에 따르면 “Liinderkopfquoten-Ausgleich”) 간의 차이인 87.9%에 해당하는 재정보조금을 받게 된다.

각 주(비엔나 주 포함)에 주어지는 일반보조금은 2005년에 1억 2백만 유로에 달했다.

⌘ 특별 보조금

특별 보조금에는 두 가지 범주가 있다.

- 책정 보조금(Zweckzuschüsse) : 이 보조금은 중앙 국가로부터의 책임 이전을 보상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는 곧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할당되고 각 주가 프로젝트 자금조달에 참여할 의무와 같은 조건이 수반되는 것을 의미한다. 각 주(주로서의 비엔나 포함)는 책정 보조금으로부터 거의 30억 유로를 받았다. 사회적 주택건설보조금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보조금으로서 2005년에는 거의 18억 유로에 달했다. 도로 보조금은 5억 6천 2백만 유로에 달했다.

- 재정보조가 필요한 주를 위한 보조금(Bedarftzuweisungen) : 이 보조금은 예산적자를 보충하고 예외적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2005년에는 이러한 목적으로 8억 9천만 유로가 분배되었다.

⌘ 기타 보조금

오스트리아의 독특함은 각 주들이 자체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유행에 있다. 2005년에 지방자치단체들(비엔나 제외)로부터 이전된 금액은 거의 13억 유로에 달하며, 그 중 99%는 운영보조금이었다.

1-3. 기타 세입

7. 오스트리아의 유류세는 2007년 7월 1일까지는 인상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주의 세입이 6천 7백만 유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의 기타 세입은 자산 매각과 재산 및 비즈니스 소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각 주는 자체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세금과 보조금을 제외한 재원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은 2005년에 대략 42억 유로(자체 세입의 22%)에 달했다. 각 주는 주로 사회주택건설대출을 유동성의 원천으로 이용해 왔다.

2. 자치단체

2005년에 오스트리아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입(비엔나 제외)은 127억 유로에 달했다. 이들의 가장 중요한 세입의 원천은 조세이다(52%).

2-1. 세입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세입은 2005년에 66억 유로에 달했는데, 그 중 63%는 공유 세금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 자체재원 세입

지방자치단체들(비엔나 제외)은 2005년에 자체재원 세로부터 자체 세입의 19%(24억 유로)를 받았다. 이들은 자체 비율을 설정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체재원세에 대한 자유재량권이 거의 없다. - 지방자치단체의 비즈니스 세금(Kommunalsteuer)은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가장 중요한 자체재원세이다. 이는 1994년에 만들어져서 비즈니스세(Gewerbesteuer)와 급여세(Lohnsummensteuer)를 대체했다. 이 비율은 법인급여의 3% 선에서 주가 설정한다. 2005년에는 지방자치단체(비엔나 포함)를 위해 21억 유로를 흡수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조세세입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거의 10%를 차지하는 액수이다.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협력을 활용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세입공유시스템(the Austrian Revenue Sharing System)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들간에 이 세金の 세입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있다. - 또 하나의 중요한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세는 부동산세(Grundsteuer)이며, 이는 5억 3천 9백만 유로를 징수하여(비엔나 시에서 징수한 9천 8백만 유로 포함)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조세 세입의 16%와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3%를 차지했다. 이 세금은 농지를 포함하여 토지와 건물 모두에 부과된다. 일단 과세 기준이 설정되면(토지의 가치에 대해 0.2%의 세율을 적용), 지방자치단체는 세율을 헌법상의 재정법률(Constitutional Finance Act)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최대한도 50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한다.

관 광 세 (Fremdenverkehrsabgabe), 여가세(Lustbarkeitsabgabe)와 공공재산의 이용에 관한 세(Abgabe for Gebrauch von öffentlichen Grund) 등과 같은 기타 자체적 세금들은 대략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세입(비엔나 포함)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 배분세

2005년에 지방자치단체들(비엔나 제외)은 배분세 수령액으로부터 42억 유로를 받았다. 비엔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16억 유로를 받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허가되는 전체 배분세입의 약 25%를 차지하는 액수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위에서 열거한 주요 배분세의 11.605%를 받는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부가가치세 수령액으로부터 21억 유로, 임금세로부터 19억 유로, 법인세로부터 5억 1천 3백만 달러, 그리고 유류세로부터 4억 1천 4백만 달러를 확보했다.

그 예외로는 광고세(86.917%) 뿐만 아니라 그 수령액이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거의 전부 유보되는(96%) 부동산양도세(Grunderwerbsteuer)와 토지보유세(Bodenwertabgabe) 등이 있다. 2005년도에는 5억 2천 6백만 유로를 받았는데, 후자의 세금 들 중에서 부동산양도세가 가장 중요한 세금이다.

각 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주로 묶임)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할당되는 총액은 세금과 인구 기준(지역과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에 따른 조세세입액)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각 주는 재정적 특징, 인구기준과 자체적인 특별한 도시비용으로 인해 더 큰 지방자치단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특수한 “인구조절 배율

(scaled population multiplier)” 등과 같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 세입부분을 할당한다. 또한 각 주는 자체적인 할당 기준을 적용하기도 한다.

2-2.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 세입의 16%를 보조금(비엔나 시의 경우에는 31%)으로부터 받는다. 더욱 많은 액수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자체적인 개별 주로부터 받는다. 각 주들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반 보조금(Schlüsselzuweisungen)과 특별 보조금(Zweckzuschüsse) 모두를 받는다.

⌘ 중앙정부 보조금

일반 보조금(Finanzzuweisungen)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능력과 자체적인 재정의 필요성에 근거를 두고 할당된다. 기금이 충분치 않은 지방자치단체들은 필요할 때 재정보조를 받는다. 2005년에 지방자치단체들(비엔나 포함)에게 직접 할당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금은 8천 7백만 유로에 달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로부터 재정보조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들을 위한 보조금을 받는다 (Bedarfszuweisungen - 2005년에 1억 4천만 유로). 어

편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수는 자체적인 재정능력 (Finanzkraft)으로서, 이는 자체재원세, 배분세 및 기타 자체 인구 규모와 관련된 지수들에 의해 발생된 세입에 근거하여 계산이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1인당 평균 1,015 유로보다 더 낮은 재정능력을 가지게 되면 추가 이전을 받을 권리가 부여된다.

지방자치단체에게 가장 중요한 책정 보조금은 공공운송과 오스트리아 재난기금(the Austrian Catastrophe Fund)을 위한 재정이전이다.

⌘ 기타 자치단체에 할당된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에 부가하여 위임된 책임을 보상하기 위한 보조금뿐만 아니라 각 개별 주로부터(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근거하여) 균등화 목적의 보조금도 받는다. 랜더(Länder)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세입(비엔나 제외)의 70%를 차지했다.

국가 보조금은 수도보조금으로부터 받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83%와 운영보조금(비엔나 제외)으로부터 받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57%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3%는 기타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받은 보조금의 형태로 받은 것이었다.

2-3. 기타 세입

수수료, 자산 매각, 임대료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 (비엔나 제외)의 경제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세입은 2005년에 41억 유로에 달했다(세입의 32%). 비엔나는 이 재원으로부터 자체 세입의 24%를 받았다. 수수료는 주로 수도, 하수도 및 폐기물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고 있다. 이들은 2001년 이후로 지방자치단체들에게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가고 있다. 2001년 이후로 수수료로부터 발생하는 세입은 13%까지 증가하여 6%의 실질증가율에 달했다.

* 세입 공유 매커니즘의 변화 오스트리아

세입공유제도는 평균 매 4년마다 회계균등화법 (Finanzausgleichsgesetz – FAG)에 의해 시작된다. 이는 배분세(gemeinschaftliche Bundesabgaben)와 다양한 단계의 정부들 간에 이루어지는 정부간 이전의 내용명세를 결정한다. 이 복잡한 세입공유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를 절충하게 된다.

- 1단계 : 중앙국가에 의해 세금이 징수되어(세율과 과세기준)이 결정된다. 일부 세금 수령액은 재원 (Vorwegabazu)에서 공제되며 PIT 세입 비율에 의해 자금이 조달되는 가정기금(the Family Fund)과 같은 추가예산 기금을 통해 특별한 지출항목에 책정된다.
- 2단계 : 나머지 세금수령액은 매 세입공유기간 중에 결정된 표준화된 핵심내용에 따라 세 가지 단계(중앙 국가, 랜더(Länder) 및 지방자치단체) 간에 배분된다. 2005년에서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 각 주들은 세금의 15.191%를 받고, 지방자치단체들은 11.605%를 받으며, 나머지는 중앙국가가 보유한다. 각 주와 지방자치단체에 할당되는 금액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랜더 (Länder)에 배분된다.
- 3단계 : 그 후 각 란트(Land)는 주로 세금과 인구 기준에 따라 자체 지방자치단체들에게 그 수령액을 재배분한다.

새로운 세입공유기간에 대한 협상이 2007년 9월과 10월에 종료되었다.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유효기간이다. 즉, 계획수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조세

세입의 재분배가 4년(또는 3년)이 아니라 6년의 간격을 두고 협상이 되게 된다. 세입공유의 핵심내용은 당분간 유지되어 왔지만, 향후에는 연방국과 지방자치단체 모두를 위해 더욱 진전된 회계적 분권화, 즉 책정된 이전은 줄어 들고 공유과세액으로부터 얻어지는 세입은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해왔다.

한동안 비용증가에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방 정부에 할당되는 재정보조금을 증가시키기로 결정이 되어왔다. 각 주들은 추가로 건강관리 경비, 특히 지역 병원(연간 1억 유로 이상)에 대해 중앙국가의 보조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세입을 공유한 후 각 주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국가에 납부한 “통합공헌액 (Konsolidierungsbeitrag)”은 점진적으로 단계적 폐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평생 보호, 아동보호, 소규모 학교와 최소한의 세입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금이 증액될 예정이다.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들(인구 수 10,000명 이하)은 예전보다 더 많은 1인당 세입을 받게 된다. 더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 손실에 대해 전액 보상을 받게 되며, 재정적 기반이 약한 대형 지방자치단체들은 2011년에 시작되는 연간 추가 보조금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인구수(주요한 세입공유 지표)를 계산하는 통계방식이 바뀌게 된다.

IV 지방공공부문 부채와 차입

● 주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대출기관으로부터 자유롭게 차입을 할 수 있으며, 그런 일이 드물기는 하지만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 지방 정부의 차입은 기본적으로 대출의 형태를 띤다. 이론적으로 보면 모든 운영활동이 대출로 재정조달이 될 수 있지만 주로 공적 투자의 재정을 조달하는데 사용된다.

1. 연방국

신용을 이용하는 것은 란트(Land) 정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중앙국가로부터는 어떠한 인가도 받을 필요가 없다. 연방국(S1312)의 총 미결제 부채는 2005년에 73억 유로, 즉 총 공공부채의 4.7% 및 GDP의 3%에 달했다. 연방국은 지방정부 부채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2.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들이 차입을 하려면 2가지의 신중한 비율에 대한 결정에 기초한 란트(Land) 정부 내에 있는

✱ 지방 기관의 “국가안정협약(National Stability Pact)” 참여

안정 및 성장협약은 마스트리히트 조약(the Maastricht Treaty)의 일환으로 세 가지 차원의 정부 간에 조인이 되었다. 이 협약은 존중해야 할 총 공공 적자단계를 정하고, 총 공공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차원의 정부간 금융제재가 실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2005년에 체결된 오스트리아 안정협약(the Austrian Stability Pact)에서, 연방국(비엔나 포함)은 스스로 2005년과 2006년 GDP의 0.6%에서 2008년에는 GDP의 0.75%로 자체 잉여분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전념했다. 지방 자치단체들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GDP 0%에 동의했다. 금융제재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이 되게 된다.

통제위원회(Gemeindeaufsichtsbehörd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들은 통제위원회가 설정하는 란트(Land)별로 다양한 최대부채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들은 국제적인 지방자치단체 예산균형이 양호하거나 균형이 잡혀 있는 경우에만 차입을 할 수 있다.

2005년 오스트리아 지방공공부문의 미결제 부채는 대략 49억 유로에 달했으며, 이는 총 공공부문부채의 3.1%와 GDP의 2%를 차지하는 액수이다.



벨기에

- 면적
30,528 km²
- 인구밀도
344명/km²
- 총 인구
- 1천 47만 명
- 연간 증가율 Δ 2000-2005: +0.4%
- 브뤼셀 인구
15만 명
- 도시 인구
97%



● 10 대도시
● 수도
Région Wallonne NUTS 1단계에 속함

EU 구조결속기금 (백만 유로, 2004년 금액)

2000-2006 프로그래밍 기간	2,158
2007-2013 프로그래밍 기간	2,014
- 집중성	577
- 경쟁력 및 고용촉진	1,265
- 영토간 협력	172

일반자료

■ 국가 조직

- 연방 국가. 지방자치단체들과 도들이 1831년 2월 7일 에 제정된 헌법에 따라 인정을 받아왔다. 1970년대 초 이래로 5번 연속으로 이루어진 헌법개정으로 인해 벨기에 왕국에서 지역사회, 지역, 도(S 조항) 및 지방자치단체(제7조)로 구성된 연방국가로 변모했다.
- 2004년 8월 25일에 벨기에에는 유럽 지방자치정부 헌장(the European Charter of Local Self-Government)을 비준했다.
- 의회군주정치:
 - 양원제 연방의회. 하원은 보통 및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150명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반면 상원은 비례입법선거를 통해 직접 선출된 40명의 상원들, 지역사회 의회가 선출한 21명의 상원들, 공동 선출된 10명의 상원들과 정당한 권리에 의한 상원들과 같은 4가지 형태의 상원들로 구성된다.
 - 왕이 국가의 수반이다.
 - 연방정부(www.belgium.be/eportal)는 수상이 이끌며 왕이 임명한 최대 15명의 장관으로 구성된다. 현재 지방정부와 관련된 책임의 대부분은 해당 지역의 책임이 되고 있다.

■ 영토 단계의 제도적 조직

벨기에에는 EU에서 5번째로 작은 나라이다. 하지만 인구 면에서 볼 때, 이는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 (네덜란드와 몰타에 이어 3번째)로서 11번째에 해당한다.

영토 차원에서 중앙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 조직구성은 도지사(gouverneurs)가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 해당 지역정부에 의해 임명되는 10개 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매우 독특하다. 따라서 도지사는 연방구성체의 대표인 반면 해당 도에 있는 연방정부의 장관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는 공공질서 및 치안의 유지와 함께 법률과 법령의 시행을 감독하며 다양한 정부 단계 간 연결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벨기에는 3단계의 지방 정부를 보유하고 있다.

- 3개의 지역사회(communautés – gemeenschappen)로 구성된 6개의 연방구성체로 이루어진 상위단계와 3개의 지역(regions– gewesten)
- 10개의 도(provincies)로 이루어진 중간 단계;
- “도시”의 지위를 가진 133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589개의 지방자치단체로 이루어진 지방자치단계(communes– gemeenten),

중앙집권적인 국가의 영토 행정

10 개 도의 도지사
(gouverneurs)

지방 정부

3개의 지역(regions – gewesten) 및
3개의 지역사회
(communautés – gemeenschappen)를
포함한 6개의 연방구성체

10개의 도
(provinces – provinces)

589개 자치단체
(communes – gemeenten)

■ 지방 정부 협회
(SUB-NATIONAL GOVERNMENT
ASSOCIATIONS)

벨기에는 자체적인 언어유산이나 지역현장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방 정부를 나타내는 6개의 협회를 보유하고 있다.

도 차원에는 2종류의 협회가 존재한다.

- 플랑드르 도 협회(Vereniging van de Vlaamse Provincies)–VVP) : www.vlaamseprovincies.be;
- 왈론 도 협회(Association des Provinces Wallonnes– APW) : www.apw.be.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는 3개의 지역협회가 도시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을 재구성하고 있다.

- 플랑드르 도시 및 지방자치단체 협회(Vereniging van Vlaamse Steden en Gemeenten– VVSG) : www.vvsg.be;

- 왈론 도시 및 지방자치단체 연합(Union des Villes et des Communes de Wallonie– UVCW) : www.uvcw.be;

- 수도 브뤼셀 지역의 도시 및 지방자치단체 협회 (Association de la Ville et des Communes de la Region de Bruxelles –Capitale – AVCB I Vereniging van de Stad en de Gemeenten van het Brussels Hoofdstedelijk Gewest– VGSB) : www.avcb.be.

마지막 3개의 협회들은 연방 차원에서 네 번째 조직으로 재구성된다 : 벨기에 도시 및 지방자치단체 연합(‘Union des Villes et Communes Belges – Vereniging van Belgische Steden en Gemeenten – UVCB– VBSG) : www.uvcb-vbsg.be.

출처 : 유럽연합통계청

* 거시경제자료(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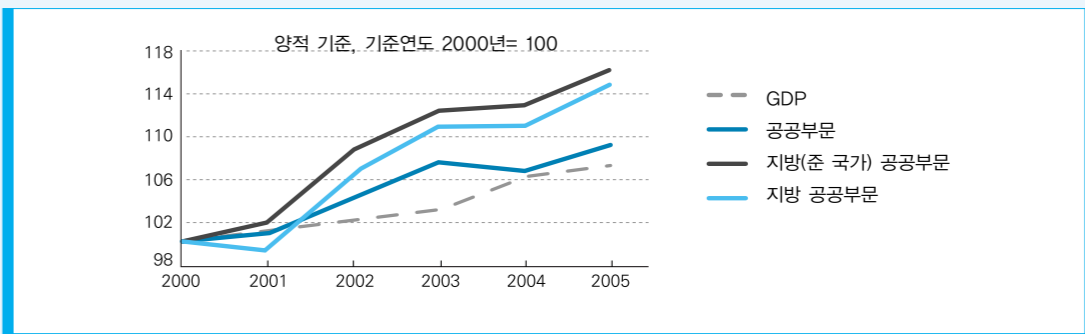
	오스트리아	EU 27개국	EU 27개국 중 순위
GDP			내림차순
백만 유로	298,541	10,990,743	7위
1인당(유로)	28,503	22,344	9위
2004–2005 변화	+1.1%	+1.8%	24위
기타 지표			오름차순
실업률(%)	8.4	8.7	18위
인플레이션 비율(%)	2.5	2.3	15위
통화	2005 환율	유로화 채택	
Euro	–	2002년 1월 1일	

* 주요 재정지표(2005년)

	백만 유로	GDP %	공공부문 %	Δ2000–2005*
지출				
공공부문	149,013	49.9	–	+1.8%
지방 공공부문	62,920	21.1	42.2	–3.1%
GFCF				
공공부문	5,304	1.8	–	–0.5%
지방 공공부문	4,717	1.6	88.9	–0.1%
세입				
공공부문	148,982	49.9	–	+1.8%
지방 공공부문	63,266	21.2	42.5	+3.2%
예산수지				
공공부문	–6,816	–2.3	–	–
지방 공공부문	346	0.1	–	–
부채				
공공부문	278,126	93.2	–	–1.4%
지방 공공부문	28,878	9.7	10.4	–2.9%

*양적 기준 연평균 성장

* 2000 – 2005 공공지출 변화



EU 구조결속기금

■ 프로그래밍 기간 2000-2006

벨기에에 대한 EU의 구조적 지원예산은 총 216억 유로에 달하며, 이는 1인당 206 유로에 해당한다(2004년 가치). 이 예산은 주로 목표 3(EU 기금의 38%)과 헤이노트(Hainault : 2005년까지 잠정적인 지원에 EU 기금의 30%)에 주로 할당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목표 2(22%)와 지역사회 계획(주로 상호협력계획)에 할당되었다. 구조적 기금의 흡수율은 2006년 말에 61%였으며, 이는 EU 평균(68%)을 밑도는 것이었다.

■ 프로그래밍 기간 2007-2013

벨기에의 전략적 준거 프레임워크에는 4가지 우선 과제가 있다.

- 비즈니스 환경 개발과 기업에 대한 지원의 제공;
- 우선적인 범주에 대한 교육훈련 및 고용의 제공;
- 환경보호, 위험방지 및 에너지 정책의 개선;
- 관련 영토의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선.

이러한 국가적 전략에 부가하여 각 지역 정부는 해당국의 연방구조에 맞추어 자체 전략을 마련했다. 벨기에에는 이러한 목표를 관리하기 위해 20억 1천만 유로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1인당 192유로와 국가 GDP의 0.10%에 해당되는 액수이다(2004년도 가치). 벨기에에는 EU 15개 회원국들 중에서 EU 기금의 확대와 후속적인 감축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나라이다(EU 15개국 평균인 -30%에 비교하여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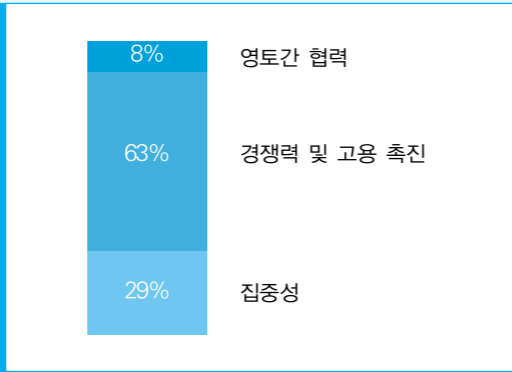
벨기에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운용 프로그램(OPs)을 마련해왔다.

- EU 기금의 63%를 차지하는 지역 경쟁력 및 고용 촉진 목표(the Regional Competitiveness and Employment Objective)에 따른 8개의 프로그램;
- 기금의 29%를 차지하는 집중성 목표(the Convergence Objective)에 따른 헤이노트(Hainault) 지방을 위한 2개 프로그램;(통계적인 단계적 폐지).

영토 협력 목표(The Territorial Cooperation Objective)는 EU 기금의 8%와 관련이 되어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며 벨기에가 이러한 목표에 따른 7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로 설명이 되고 있다(유레지오/뫼즈-랭(Euregio/Meuse-Rhin), 그란데 지역(Grande Region), 북서유럽, 프랑스-왈론-플랑드르(France - Walloon-Flanders), 등).

구조적 기금의 관리는 완전히 분권화되어 있어서 각 지역 정부가 자체 운용 프로그램과 시행에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 목표별 EU 기금의 명세



추가 정보

- 왈론 지역 장관(Ministere de la Region wallonne) - Direction generale de l'economie et de l'emploi : <http://europe.wallonie.be>
- 플람스 경제장관(Vlaams Ministerie van Economie, Wetenschap en Innovatie: <http://ewi-vlaanderen.be>
- 수도 브뤼셀 지역 장관(Ministere de la Region de Bruxelles-Capitale) - Cellule de Coordination et de Gestion du FEDER 2007-2013 : www.bruxelles.irisnet.be

지방조직 현황

1. 지방 정부 단계

1970년대 이후로 이루어진 다섯 차례의 헌법개혁 조치로 1831년 제정된 헌법에 대한 광범위한 개정 이 이루어져서 점진적으로 일원화된 국가구조에서 6개의 연방구성체들로 이루어진 연방국으로 변모 해갔다.

- 3개 지역(헌법 제3조) : 플랑드르 지역(Vlaams Gewest), 왈론 지역(Region wallonne) 및 수도 브뤼셀 지역(Region de Bruxelles-Capitale - Brussels Hoofdstedelijk Gewest);
- 3개 지역사회(헌법 제2조) : 플랑드르 지역사회(Vlaamse Gemeenschap), 프랑스 지역사회

(Communaute française) 및 독일어를 사용하는 지역사회(Deutschsprachige Gemeinschaft Belgiens).

각 지역사회는 고유의 문화와 언어를 지니고 있는 반면, 한 지방을 결정하는 구성요소는 자체 지역이다. 어떤 지역사회들의 지역과 지방은 중첩되거나 겹쳐져 있는 경우가 있다.

왈로니아지방(Wallonia)은 벨기에 총 면적의 55%를 차지하고 있어서 플랑드르 지방(Flanders)보다 약간 더 큰 반면, 인구의 측면에서는(플랑드르의 58%와

* 지역 핵심 자료(2005년)

	인구	면적	GDP	지방자치단체
	주민 수(1000명)	Km²	1인당 유로	수
수도 브뤼셀 지역	1,015	162	56,104	19
플랑드르(Flemish) 지역	6,055	13,522	28,241	308
왈론(Walloon) 지역	3,404	16,844	20,670	262
총계	10,474	30,528	28,800	294*

수도 브뤼셀의 10%와 비교하여) 32%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플랑드르 지방의 인구밀도는 왈로니아 지방의 2배 이상이다. 독일어를 사용하는 지역사회의 인구는 약 70,000명 정도이다.

재정적 측면에서 볼 때,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곳은 수도인 브뤼셀이며, 이곳은 왈로니아 지방의 1인당 GDP보다 더 높은 플랑드르 지방의 2배에 이른다.

벨기에는 영토 차원에서 두 가지 단계를 보유하고 있다. 10개의 도(provinces)로 구성된 중간 단계와 589개의 지방자치단체(communes- gemeenten)로 구성된 지방 단계가 바로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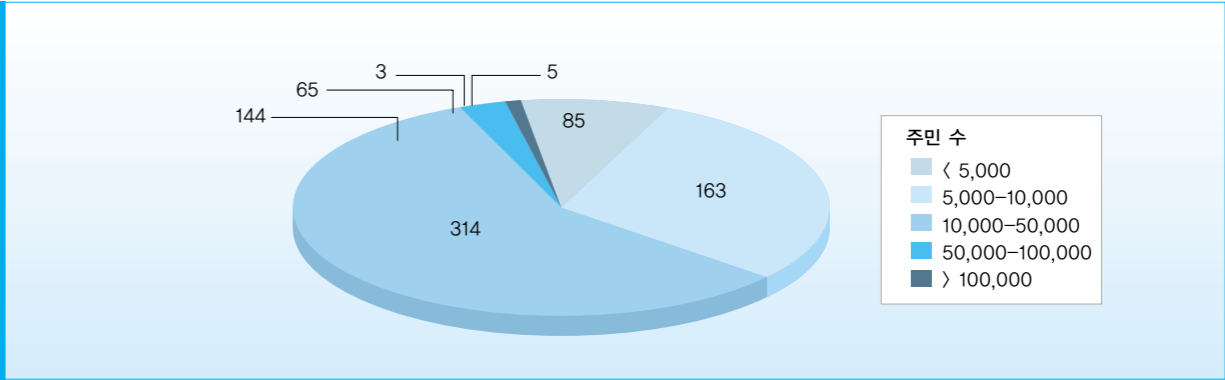
도(Provinces)는 오랫동안 존재해왔는데, 도의 재정이 지역주의화된 이후로, 이들의 조직은 지역법령에 의해 결정이 되어왔다. 도에는 수도 브뤼셀 지방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포함된다. 왈로니아 지방과 플랑드르 지방에는 다섯 개의 도가 있다. 도는 여러 당국의 감독적 통제를 받으면서 도의 이익에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모든 사안을 관리하는 자치적인 기관이다. 도의 지리적 규모는 1에서 4까지 걸쳐있는 반면(왈룬 브라반트(Walloon Brabant) 및 룩셈부르크(Luxembourg)지방 간), 인구 규모는 1부터 6.5까지 다양하다(룩셈부르크(Luxembourg)와 앤트워프(Antwerp) 간).

지방자치단체들은 헌법과 지방자치단체법(브뤼셀) 및 지역법령(플랑드르 및 왈로니아)에 근거를 둔 자체 조직방식에 의해 인정을 받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지방 정부단계를 대표하며, 도와 마찬가지로 일부 다른 차원의 당국, 특히 지방의 감독을 받는다.

벨기에는 1831년에 2,739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보유하고 있었다. 자발적인 합병의 성공이 제한적이었던 입법당국과 정부는 1971년부터 계속 의무적인 합병을 선택했다. 1975년도에 있었던 왕실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수를 2,359개에서 596개로 줄이고 나서 나중에는 현재의 단계인 총 589개로 감축했다. 플랑드르 지방은 308개의 소도시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있는 반면, 왈로니아 지방은 262개(독일어를 사용하는 9개를 포함)가 있고, 수도인 브뤼셀 지역은 19개(2개 국어를 사용하는 정권)가 있다.

벨기에 지방자치단체들의 평균 규모는 대략 17,910명의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지역마다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플랑드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반적으로 왈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13,000명과 비교하여 19,600명)보다 인구밀도가 더 높다. 모두 합쳐 볼 때 벨기에 지방자치단체들의 반 이상이 10,000명에서 25,000명까지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5%는 50,000명 이상의 인구를 가지면서 27개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있으며, 그 중 8개는 100,000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 인구규모에 따른 589개 지자체 내역(2005년)



이 마지막 그룹은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하위부문(구역)을 구성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대략 465,000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벨기에 최대의 도시인 앤트워프 만이 실제로 그렇게 자체 내에서 하위부문(구역)을 구성해왔다. 프랑스와 독일 정권의 유물인 133개 지방자치단체들은 과거의 왕실법령과 2002년 1월 1일 이후의 지역정부법령 덕분에 이루어진 “도시(city)”라는 영예로운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브뤼셀 시는 벨기에 왕국의 수도이자 프랑스와 플랑드르 지역사회의 수도이기도 하다. 이는 수도인 브뤼셀 지역에 있는 19개 지방자치단체들 중 하나이다. 이 시는 145,000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이 지역 인구의 거의 15%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이 19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지역에서 인구

가 밀집된 도시의 중심지를 구성하고 있다. 나무르 시(The City of Namur : 인구 107,178명)는 왈로니아 지방의 수도인 반면, 유펜 시(The City of Eupen : 인구 17,500명)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지역사회의 수도이다.

2. 지방 정부 정치 체제

☞ 지방 정부 정치단체

○○● 연방 구성체

각 연방구성체들은 입법책임을 가지고 있는 심의기

※ 분권화에 관한 최근 수정사항

1970년에 시작된 연방화 과정은 1980년과 1988년 및 1993년에 몇 가지 연속적인 단계를 거쳤으며 랑베르몽 협약(Lambermont agreements)에 포함된 헌법개정에 의해 2001년에 완성되었다.

이러한 연속적인 기관개혁으로 인해 실제로 완전히 지방의 수중에 있던 지방당국의 조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2001년 7월 13일에 제정된 특별법에서는 주로 언어적인 평형의 준수를 위한 일부 예외와 함께 헌법적인 지방자치의 보장이 존중되는 한 구성에 대한 책임, 조직 책임 및 자체 지역의 도 기관들과 지방자치기관들의 운영 방식에 대한 책임을 각 지방에 부여하고 있다. 플랑드르 지방과 왈론 지방은 최근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채택하면서 자신들의 책임 하에 지방자치단체들을 규율하는 유기적인 프레임워크를 수정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책임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 지방자치단체 법령(Gemeentedecreet) : 플랑드르 지방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운영방식과 일상적인 관리 방식에 영향을 주면서 지방자치단체 법률에 대한 광범

위한 개혁을 시행했다(2005년 7월 6일 제정 법령). 최초의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를 위한 새로운 규칙을 규정하는 두 번째 법령(2006년 2월 1일 제정 법령)에 의해 완성되었다.

- 지방의 민주주의와 분권화 법전(Code de la democratie locale et de la decentralisation – CDLD) : 왈론 지방은 다양한 지방정부입법을 단일법전으로 통합하여 그 순위를 정함으로써 이 작업을 시작했다. 이는 그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와 지방자치단체들의 구성과 운영(더욱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시장의 임명에 사용되는 방법의 수정)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법률(2005년 12월 8일 제정 법령)의 초기개혁을 단행했다. 더욱 최근에 와서 왈론 지방은 지방정부감독에 관한 법령을 개정했다.

벨기에는 현재 2007년 6월에 있었던 연방 선거기간 중 알려진 심층 분화과정에 이어 새롭고 심층적인 기관개혁이 임박해 있는 상태이다.

관(지방/지역사회 의회)과 집행기관(지방/지역사회 정부)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5년 주기로 선출된다. 가장 최근의 지역사회와 지방선거는 2004년 6월에 치러졌다.

이들은 현재 기관들의 통합을 위한 플랑드르 지방과 지역사회의 결정에 따라 하나로 통일된 플랑드르 의

회와 단일화된 하나의 플랑드르 정부(Vlaams Parlement- Vlaamse regering)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브뤼셀은 2개 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특별한 지역사회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으며, 언어의 사용, 즉 지역행정기관 및 의회에서 2개 국어를 사용하는 구성과 아울러 이 지방에서 2개 국어를 사용하는 지역을 통해 지역사회의 책임을 실행(프랑스 플랑드르와 일반 지역사회 협의회에 의해 시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별한 중요성이 존재한다. 이 모든 지방과 지역사회 기관들은 여러 부처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지방정부를 담당하고 있는 장관을 포함한 고유한 행정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 지방 정부

도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조직방식은 이들과 관련된

제정법의 지역주의화의 결과로 일부 지역의 플랑드르 지방과 왈로니아 지방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도 협의회(conseil provincial- provincieraad)는 매 6년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동시에 비례대표제를 통해 보통 및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47명에서 84명에 이르는 의원들로 구성되는 도 심의기관이다. 가장

	의회	정부
왈론(WALLOON) 지역 www.wallonie.be	보통 선거권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75명의 대표	의회에 의해 선출된 9명의 의원(최대)
프랑스 지역사회 www.cjivb.be	94명의 회원 구성: – 75명의 왈론(Walloon)의회 의원; – 의원 중 브뤼셀-수도 지역 협의회 (the Brussels-Capital Regional Council)의 프랑스어 사용단체에 의해 선출된 19명의 의원	의회에 의해 선출된 8명의 의원
플라망(FLEMISH) 지역사회 및 지역 http://start.vlaanderen.be	124명의 대표 구성: – 플라망(Flemish Region) 지역주민의 보통 선거권에 의해 직접 선출된 118명의 대표: – 브뤼셀-수도 지역(the Brussels-Capital Region)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6명의 대표	11명의 의원(최대). 최대의석을 가진 당에서 정부수반이 선출된다.
브뤼셀(BRUSSELS)-수도 지역 www.Brussels.irisnet.be	보통 선거권에 의해 선출된 89명의 대표	의회가 선출한 8명의 의원 (3명의 국무장관 포함)
독일어를 사용하는 지역사회 www.dglive.be	보통 선거권에 의해 선출된 25명의 대표	의회가 선출한 4명의 의원

최근의 선거는 2006년 10월에 치러졌다. 상설 대표단(deputation permanente)은 플랑드르 지방에서는 대표단(deputatie)이라 하고, 왈루니아 지방에서는 도 협회(college provincial)라고 하는 도의 집행기관이다. 이는 자체 회원들 중에서 도 협의회 회원들이 지명한 6명의 상근 대표를 보유하고 있으며, 도 협의회는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행정감독의 일부를 수행하는 일을 담당한다.

이는 연방정부가 승인을 한 후에 해당 지역 정부가 지명하고 해고하는 지사가 이끌어거나 자체 대통령을 선출하는 심의회를 이끌어지는 않는다. 도 행정부는 도 협의회가 임명하는 서기(greffier- griffier)가 관리한다.

벨기에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해당 지역의 새로운 법령을 채택한 후 이제는 더 이상 전국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조직되고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는다(2005년 7월 및 2006년 2월 플랑드르 지방의 지방자치단체법령(Gemeentedecreet of July 2005 and of February 2006 in Flanders); 2005년 12월 왈로니아 지방의 분권화에 관한 지역민주주의 법전(Code de la democratie locale et de la decentralisation of December 2005 in Wallonia))

지방자치단체 협의회(The municipal council)는 지방자치단체의 심의기관이다.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인구 규모에 따라 7명에서 55명의 회원들로 구성된다.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매 6년마다 선출되며, 가장 최근에는 2006년 10월에 치러졌다. 시장(bourgmestre- burgemeester)은 자동적으로 왈론 지방과 수도 브뤼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이끌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는 자체 회장을 플랑드르 지방에서 선출한다.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는 시장과 함께 시장 및 부시장 단(college des bourgmestre et echevins - college van burgemeester en schepenen)을 구성하는 부시장을 선출한다. 이 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심의기관이므로 왈론 지역에서는 공동체로 알려져 있다. 부시장의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규모에 달려 있다(2에서 10까지의 범위).

지역 정부에 의한 시장의 지명은 관련 지역에 따른 여러 가지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누구든지 다수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큰 리스트에 가장 선호하는 표를 받는 사람이 왈루니아 지방의 시장으로 임명된다. 수도인 브뤼셀 지역에서는 리스트에서 선출된 다수 대표들과 최소한 다수의 선출된 협의회 대표들이 선택한 후 지역정부가 시장을 임명한다. 플랑드르 지방에서는 플랑드르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대표들 중에서 시장을 임명한다(이 협의회에서 후보자를 배출할 수 있다.).

☞ 시민들의 현지 의정활동 참여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는 자체 계획이나 충분한 수의 구성원들(이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의 요청에 따라 “지방공익협의회(local public consultation)”를 조직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협의회는 사람, 재정, 예산, 조세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수 등과 관련된 문제에 이용될 수는 없다. 투표는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참여한 경우에만 계수가 되며, 그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당국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조건들은 현재 지역 법령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3. 지방정부의 책임

☞ 관할 지역

○○● 연방 구성체

연방구성체의 책임은 독점적인 것이며, 이는 중앙 국가가 개입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지역사회는 예를 들어 문화(극장, 도서관, 시청각 등), 모든 단계의 교육(대학 및 과학연구 포함) 및 언어의 사용 등과 같이 자체 인구에 영향을 주는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는 건강정책(예방과 건강관리) 및 사회적 지원(젊은이의 보호, 사회 복지, 가정

지원, 이민자의 환영회 등)과 같은 “사람과 관련된 분야(person-related areas)”를 관리하기도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는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의 국제 관계를 담당하기도 한다.

지역에 대한 책임은 각 헌법적 개혁을 통해 확장되어 왔다. 지역은 가장 넓은 의미의 용어로 “영토 계획(territorial planning)”과 연관된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는 경제, 고용, 용수정책, 주택건설, 공공사업, 에너지, 운송(철도 제외), 환경, 영토 및 도시 계획, 자연보호 등과 같은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2001년 7월 13일에 제정된 특별법이 발효된 이후, 지역사회는 해외무역, 농업, 지방정부의 조직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후자와 관련하여 각 지역들은 구체적으로 자체 영토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와 지방자치단체 기관에 대한 모든 조직규칙을 실질적으로 제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 헌법상의 지방자치권 보장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또한 도와 지방자치단체 양자의 구성, 조직, 책임의 설정 및 운영에 대한 업무(영토 경계선의 수정, 지방정부의 수립, 합병이나 해체, 평의원 숫자의 변동, 시장선거방식에 대한 수정, 행정감독 등)를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독일어를 사용하는 지역사회는 자체 영토 내에 있는 일부 왈론 지역에 대한 전면적 또는 부

분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양쪽의 합의로 독일어를 사용하는 지역사회는 2005년에 기념물과 유적지의 보호, 고용정책, 독일어를 사용하는 9개의 지방자치단체들과 독일어를 사용하는 경찰지역의 감독과 재정조달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했다.

○○● 지방 정부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도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고위 당국(연방국, 지방, 지역사회)의 감독과 통제 하에 자신들이 수행하는 책임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지방 문제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광범위한 자치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책임은 제정법에 명료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는 도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단순한 전제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헌법 제41조).

따라서 각 도는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 분야(더욱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의료보조나 상업부문의 전문학교 설립을 통한 중고등 교육), 사회문화적 인프라, 의료보호 및 사회 정책 등에 있어서 주도권을 누려왔으며, 현재는 일반적으로 환경(소음, 공해), 도로 및 수로, 경제, 운송, 공공사업 및 주택건설(사회주택건설 보조금)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맡겨진 임무에는 한편으로는

고위 당국이 이들에게 귀속시킨 임무가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이 되는 임무가 포함된다.

전자에는 공법과 질서, 시민행정기능에 대한 관리와 인구등록부의 유지 등에 대한 책임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적인 속성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공공사회복지센터를 통해 도시계획, 운송(더욱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도로 네트워크 및 도시 운송), 교육(교육의 조직, 취학 전 교육기관과 초등학교의 건설과 유지 및 일부 대형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직업학교, 대학 단계의 교육), 문화 및 스포츠(도서관, 박물관, 스포츠 및 문화시설), 환경 문제(음용수, 하수도, 폐기물 관리, 친환경 공간 등), 관광, 건강 및 사회복지 등이 포함되는 광범위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브뤼셀 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은 1970년에 일부 책임을 19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단일 기관(agglomeration de Bruxelles- Brusselse agglomeratie)으로 재편성하는 독립적인 공법상의 기관으로 이전시켰다. 1989년에 수도 브뤼셀 지역은 이 책임을 다시 되돌려 받았다(소방, 응급의료관리, 가정 폐기물).

⌘ 지방 공공서비스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지방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 기관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자유롭게 지방(또는 도) 공기업을 설립하고 독립적인 내부 또는 외부 기관들을 창설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책임에 대해 공익기관과 하청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간(inter-municipal)” 구조 속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재원을 마련하며, “지방의 비영리 협회(municipal non-profit making associations)”가 가지고 있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다.

왈로니아 지방의 경우, CDLD는 일반적인 공기업과 자율적인 공기업(regies communales ordinaires et autonomes)으로 알려진 두 가지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대해 정의해왔다. 자율적인 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와는 분리된 별도의 법률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산업이나 상업부문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

플랑드르 지방의 경우, 2005년 7월 15일에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법령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업무수행의 유연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부(intern verzeijstandigde agentschappen -IVA) 또는 외부(externe verzeijstandigde agentschappen-EVA)의 “독립기관(independent agencies)”들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새로운 요소를 도입했다.

내부기관들이 법률적인 실체는 아니지만 독립적으

로 활동을 할 수 있다(수영장, 도서관 등). 외부기관들은 법률적인 실체이므로 각종 수단과 인력의 이전이 가능하다. 외부기관은 자율적인 공기업이 되거나 민간의 법률구조(기업, AISBL과 같은 비영리기관 또는 재단)를 채택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공공사회복지센터(Centre Public d' Action Sociale - CPAS- Openbare Centra voor Maatschappelijk Welzijn - OCMW)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법률적인 실체가 되는 공익기관들로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사회복지, 의료-사회, 심리, 물질적이나 재정적인 성격을 띠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센터들의 책임에는 가정 도우미(따뜻한 음식, 보호 등), 특별기관들(요양소, 병원 등)의 관리 및 물질적인 지원(통합 보조금)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서비스가 포함된다.

공공 안전의 분야에 있어서 경찰력 개혁(1998년 12월 7일 제정된 법률)의 일환으로 2002년 1월 1일자로 발효된 “복수 지방자치단체 경찰구역(multimunicipal police zones)” (zones de police pluricommunales - politiezones)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법률적인 기관으로서 자체적인 인력과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 경찰구역은 평균적으로 3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보유하고 있다. 단일 지방자치단체의 경찰구역도 존재는 하지만 법률적인 기관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대도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방 공공부문도 매우 구체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다수의 지방공공기관들을 보유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제방을 쌓은 토지의 보존, 배수 및 관개, 수로 당국(wateringues)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농업, 사람의 소비와 교회협의회(fabriques d 'eglise- kirchenfabriken)의 모두를 위한 좋은 용수의 공급을 확보하고 가톨릭 종교활동을 위해 할당된 기금의 관리를 담당하기도 한다. 기타 공공기관들은 지방자치단체와 도의 단계에서 비 종교 지역사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위해서도 이와 유사한 업무를 보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지방자치단체 간 기업들(intercommunales)을 통해 특별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익 기능(활동 및 서비스)의 관리를 분담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들은 공사법 모두의 적용을 받는 공익적인 법적 기관들이다. 이들은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의 조합회사(SC, CV), 또는 비영리협회(ASBL)일 수도 있다. 이들은 최소한 2명의 지방자치단체 주주를 보유해야 하며 이들의 자본은 전체가 공적이거나(“순수한(pure)” 지방자치단체간 기업), 공사적 파트너를 동반할 수 있다(“혼합형(mixed)” 지방자치단체 기업).

벨기에는 2005년 12월 31일자로 225개의 등기된 지방자치단체간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고, 총 매출액이 85억 유로에 달하며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다. 에너지, 의료·사회 부문, 용수 관리, 경

제팽창, 폐기물 관리 등이 자체 활동의 거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에 경제적 비중은 에너지 부문(전기 관리 및 가스 유통 네트워크)에서 가장 높았으며(58%), 그 다음으로 용수(12%)와 금융(12%)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비중은 2003년 7월에 플랑드르 지방과 2007년 1월 이후 왈로니아 지방과 브뤼셀에 도입된 에너지 시장 및 관세규정의 철폐의 결과로 줄어든 것 같다. 이 지역들은 한편으로는 플랑드르 지방의 지방자치단체간 기업들의 숫자를 늘려가면서(활동의 분리),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왈로니아 지방에서(합병이나 흡수를 통해 향후 그 숫자를 50%까지 줄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그 숫자를 줄여가면서 이 부문에서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해왔다.

플랑드르 지방은 공사 파트너 관계를 증진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을 마련했다(2003년 7월 9일 제정된 법령). 플랑드르 지방에서 PPP가 출현한 것은 의심할 바 없이 20년에 걸쳐 건설 부문에서 공공 당국과 사기업 간의 협력을 권장해왔던 네덜란드 법률의 영향 때문이었다. 플랑드르 지방은 이미 네덜란드 모델(Vlaams Kenniscentrum Publiek-Private Samenwerking - PPS)에 근거하여 우수한 PPP 센터를 세워서 PPP 프로젝트의 준비와 평가업무를 담당하면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입법은 수도 브뤼셀과 왈룬 지역에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2005년도 말 현재 벨기에의 공

공자본경비의 2% 미만이 PPP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러한 형태의 파트너 관계는 주로 주요한 중심도시(플랑드르 지방의 겐트, 앤트워프 등)의 혁신과 왈로니아 지방의 도시개선활동에 사용되었다.

4. 지방 정부 법률의 통제

2001년 7월 13일에 제정된 특별법의 채택 이후로 각 지방들은 도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조직 및 행정감독권의 행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효력이 있는 일반원칙들을 존중하는 한 감독 규정을 수정할 수도 있다.

- 지역행정감독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형태를 띌 수 있다.
- 불법적이거나 일반적인 이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 행위의 취소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험적 법적 통제(통상적인 감독);
 - 행동이 사전 승인이나 인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행사되는 사전 법적 통제(구체적인 감독)

연방국과 지역사회 역시 자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구성체들(경찰, 도시화, 등)

을 조직하고 행정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정부의 장관의 자격으로 이 지역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감독과 행사되는 통제형태에 따른 결정들은 지역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재정과 관련된 결정사항들은 가장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왈로니아 지방에서는 감독이 CDLD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실제로 통제는 통상적이든 특별한 것이든 간에 흔히 1차적인 통제단계의 지위에서 도가 수행하는 반면, 지방정부는 행정적인 상환절차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플랑드르 지방의 지방자치단체 법령에는 내부통제절차는 지역외부감사위원회(Gewestelijke externe auditcommissie)와 함께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서기가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행동의 적법성, 재정자료, 재고 목록, 회계절차, 연간회계의 정확성에 대한 감사와 지방자치단체 행정부가 설치한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다.

II 지방공공부문 지출

● 2005년에 지방 공공부문¹ 전체의 경비는 거의 630억 유로에 달한 바, 이는 1인당 6,000 유로 이상, 즉 GDP의 21.1%와 총 공공경비의 42.2%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지방 공공부문 내에서 지방과 연방정부의 비통합적 경비는 2005년에 440억 유로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의 59%를 점유한 지역사회와 지방들이 그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했다. 지방의 차원에서 볼 때, 지방 자치단체들은 가장 큰 재정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 경비의 36%와 지방 경비의 88%).

경비의 가장 큰 부분(89%)는 유동성 경비로 가게 되

는데,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력경비(54%)로 간 다. 이 경비들은 지방자치예산보다 연방구성체와 도 구성체 예산에 대해 더 비중이 높다. 2001년에 연방 구성체와 지방구성체들은 약 663,000명을 고용했는데, 이는 모든 공적 고용의 71%를 차지하며, 이 비율은 연방구성체에서 363,000개의 일자리로, 지방 단계에서는 300,000 개의 일자리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브뤼셀과 왈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세한 지역사회가 재정을 보조하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의 비중으로 인해 직원경비 구조에서는 지역간 차이를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 예산의 주요한 부분을 자본

* 지방 정부 지출(2005년)

지방자치단체			도		지역사회 및 지방		총계	
	백만 유로	%	백만 유로	%	백만 유로	%	백만 유로	%
경상 지출	13,416	84.5	1,920	92.1	1,171	56.2	165	7.9
－ 이 중 인건비	5,961	37.5	24,144	92.2	16,647	63.6	2,033	7.8
자본 지출	2,459	15.5	39,480	89.4	23,779	53.9	4,658	10.6
총계	15,875	100.0	2,085	100.0	26,177	100.0	44,138	100.0

통합 자료가 아님. – 출처 : 2006년 멕시코 지방 재정(Dexia local finance 2006), 벨기에 국립은행(Belgostat)

1. 지방 공공부문은 6개의 연방구성체(S1312)와 지방공공부문(S1313)의 비통합적 총계와 일치한다. 전자는 준 지역공공기관(환경관리기업, 구직자 지원서비스 등)의 예산과 함께 연방구성체 정부와 통합된다. 후자에는 지방자치단체(자치적인 공기업 제외), 도 및 공공사회복지센터(CPAS- OCMW), 경찰지역, 해안간척지, 수로당국 및 상업적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간 기업(예를 들면, 소방서비스) 등과 같은 다양한 지방 구성체들이 포함된다.

* 경제 기능별 지방 공공 부문 지출*(2005년)

	지방 공공부문 ²		연방구성체 ³		총계	
	백만 유로	%	백만 유로	%	백만 유로	%
교육	4,117	19.8	16,533	39.2	20,650	32.8
일반 공공 서비스	4,964	23.9	7,220	17.1	12,184	19.4
사회적 보호	3,402	16.4	7,336	17.4	10,738	17.1
경제업무	1,994	9.6	7,156	17.0	9,150	14.5
여가, 문화 및 종교	1,937	9.3	1,827	4.3	3,764	6.0
공공질서 및 안전	2,352	11.3	98	0.2	2,450	3.9
환경 보호	1,019	4.9	814	1.9	1,833	2.9
주택 및 지역사회 편의시설	459	2.2	736	1.7	1,195	1.9
보건	511	2.5	445	1.1	956	1.5
방위	0	0.0	0	0.0	0	0.0
총계			42,165	100.0	62,920	100.0

* COFOG 분류에 기초함 –출처 : 벨기에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Belgium.)

경비에 쏟고 있다(도와 연방구성체의 8%와 비교하여 15%).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 공공자본경비의 53%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경제 기능별 경비분석 자료를 보면 지방 공공부문에서 2005년도 교육관련 예산의 거의 1/3을 지출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특히 지역사회(이들이 기초단계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비를 보조하고 중고등 교육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와 중고등교육(도)과 함께 기초 교육(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당국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항목은 일반 서비스(19%)와 사회

보호(17%)이다. 사회보호경비에는 공공사회복지센터에 대한 지원과 공공병원, 휴양 및 재건가정, 가족 지원, 가정지원서비스의 조정 등과 같은 보조 서비스가 포함된다. 지방공공당국은 이러한 서비스의 운영자의 자격으로 일선에 있는 반면, 지방(그리고 그보다 정도가 덜한 지역사회) 역시도 그러한 서비스의 운영 및 자본경비보조금을 통해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그리고 지역사회)도 이러한 부문들에 대한 광범위한 자체 책임에 발맞추어 자체 경비의 17%를 경제 업무와 운송 등에 담당하고 있다.

2. 이 자료에는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와 도보다 더욱 광범위한 부분이 포함되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 지방 및 도의 공공행정기관, 즉 CPAS- OCMW, 경찰구역, 비상업적인 지방자치단체 간 기업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3. 이 자료에는 실제로 연방구성체, 즉 준 지역공공기관(환경관리기관, 구직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 등)에 보고하는 공공행정기관의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및 지방보다 더 광범위한 부분이 포함된다.

III 지방공공부문 수입(차입 제외)

● 2005년 전체로서 지방 공공부문에 대한 차입을 제외한 세입은 633억 유로에 달했다.

지방 공공부문 내에서 연방구성체와 지방정부는 차입을 제외한 비 통합 세입으로 거의 495억 유로를 받았다. 이러한 세입의 가장 큰 몫은 연방구성체로 지원되는 반면(69%), 지방자치단체들에게는 27%, 도에는 4%가 지원된다.

책임 및 이에 상응하는 재정수단 등의 결과로 과거 10년 동안에 걸쳐 상당부분 변했다. 1989년도의 특별 재정법(2001년 7월 13일 특별법에 의해 개정됨)은 특히 훨씬 더 많은 회계적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채용자와 지방에 대한 회계관할의 확장 등을 다루었기 때문에 중요했다. 반대로 연방구성체는 지역별로 다른 규정들을 따르면서 개별 영토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와 도에 대한 금융방법을 수정했다.

이 세입의 구조는 연방화 과정과 여러 가지 협약이전 조세세입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도 및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지방에는 더욱 큰 재정운용의 주요한 원천

※ 지방 정부 세입(2005년)

	지방자치단체 ⁴		도 ⁴		지역사회 및 지방		총계	
	백만 유로	%	백만 유로	%	백만 유로	%	백만 유로	%
세수	6,037	45.5	938	50.2	31,046	90.4	38,021	76.8
– 자체자원세	6,037	45.5	938	50.2	6,246	18.2	13,221	26.7
– 배분세	–	–	–	–	24,800	72.2	24,800	50.1
보조금	5,907	44.5	755	40.4	1,966	5.7	8,628	17.4
– 책정 보조금	3,028	22.8	553	29.6	–	–	3,581	7.2
– 일반 보조금	2,880	21.7	202	10.8	1,966	5.7	5,048	10.2
기타 세입	1,325	10.0	175	9.4	1,343	3.9	2,843	5.7
총계	13,269	100.0	1,868	100.0	34,355	100.0	49,492	100.0

통합 자료가 아님.. – 출처 : 2005년도 및 2006년도 덤시아 지방 재정(Dexia local finance 2005 and 2006), 연방공공재정에 대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of the Federal Public Finances Service)(2005년 조정).

4 이 수치들은 일반 세입만을 계정에 산입하고 있다.(즉, 당기 세입).

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조세세입이(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45.5%와 도에 대해서는 50%가 조금 더 되는) 차입을 제외한 자체 원천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와 도 모두에게 중요한 세입 부분을 구성하고 있지만(각각 44.5%와 40%), 이들은 연방구성체의 경우에는 차입을 제외한 세입의 6% 정도만을 차지하고 있다. 기타 세입,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수수료 세입은 지방 세입의 단 6%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거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1. 연방구성체

지역사회와 지방의 세입은 2005년에 344억 유로로 증가했다. 이들 간의 조세 세입은 총 세입의 90% 이상을 차지했으며 보조금(6%)과 기타 세입의 원천(4%)들보다 훨씬 더 앞선 것이었다.

1-1. 조세 세입

연방구성체의 조세 세입은 2005년에 310억 유로가 넘

었으며, 그 중 가장 큰 부분은 배분세입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 자체자원 세입

자체자원세입은 2005년도에 대략 62억 유로에 달했으며, 이는 연방구성체의 자체회계세입의 20%이며 자체 총 세입의 18%를 차지했다. 12가지의 지방 자체 자원세가 존재한다. 모든 자체자원 회계세입의 절반 이상이 플랑드르(왈로니아 지방의 28%와 수도 브뤼셀 지역의 16%와 비교하여 56%)지방으로 간다. 이들 세금의 일부가 중앙국가세금과 관련된 누진소득세인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과세율에 대한 특정한 자유재량권이 허용되기 때문에 자체자원세로 간주된다. 이는 연방공공재정원(the Federal Public Finance Service)이 징수하여 그 수령액은 해당 지방들에게 재분배된다.

세 가지의 주요세금은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된 등록세(droits d’enregistrement sur les ventes de biens immeubles - registratierechten op de verkopen van onroerende goederen- 2005년도 연방구성체의 자체 자원세입의 36%), 상속세(droits de succession-successierechten- 24%) 및 차량교통순환세(taxe de circulation sur les vehicules automobiles-verkeersbelasting op de autovoertuigen- 20%)이다.

또한 이 밖에도 부동산에 대한 원천세(precompte immobilier - onroerende voorheffing) 뿐만 아니라 교통서비스에 산입되는 세금, 기부관련 세금, 저당 등

록세, TV 및 라디오 허가수수료(왈로니아 지방에만 해당)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다. 이 세금은 원료 및 장비뿐만 아니라 토지와 건물에 대한 토지등기세입의 비율에 상응한다. 지방들은 기초세율을 수정할 수 있고 이 세금에 대한 면세에 합의할 수가 있으며, 이에 대해 도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추가로 상팀(centimes)을 부가할 수 있다(아래 참조).

⊗ 배분세입

2005년에 배분세입은 연방구성체 조세세입의 80%를 차지했으며, 자체 총 세입의 72%를 차지했다. 지방은 개인소득세(impôt national des personnes physiques - Personenbelasting)의 일부를 받는다. 각 지역에 배당되는 전 세계적인 금액은 소비자지수와 벨기에 경제의 실질성장율에 근거를 두고 변화한다. 그리고 나서 이는 매년 각 지역의 IPP 산출액에 상응하는 “적정이윤(fair return)”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지역들 간에 재분배된다. 각 지역들은 추가로 상팀(centimes)을 부과하거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각 지역, 중앙국가 및 기타 나머지 지역들 간 협의절차에 따라 “공제(subtractions)”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받는 부분에 대해 일정한 자유재량권을 보유하기도 한다. 지역사회의 배분세입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국가조세에 의해 발생된다.

- 부가가치세. 매년 재검토된 후 두 지역사회에 재배분되는 전 세계적인 금액은 한편으로는 소비자지수

와 또 다른 한편으로는 18세 이하의 인구 수의 변동에 따라 변화한다. 최종적인 금액은 프랑스와 플랑드르 지역사회가 6세부터 17세 사이의 학생들의 총계에 기초를 두고 공유한다.

- 개인소득세(IPP- PB). 재분배 메커니즘은 지역별로 사용되는 메커니즘과 동일하다(산출의 출처).

1-2. 보조금

보조금은 연방구성체의 총 재원의 작은 부분만을 차지한다(6% 미만). 각 지방에서는 공익고용지원을 위해 지방정책에 대한 연방예산의 신용도에 공헌하는 인출권(droits de tirage- trekkingsrecht)을 받는다.

그 성격으로 인해 수도 브뤼셀 지역은 세 가지의 특별한 중앙국가 보조금을 받기도 한다. 브뤼셀은 공공건물이 재산 누진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보조금 혜택을 받으며,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의 부시장의 수를 늘리는 두 번째 혜택을 받고, 마지막으로 국가의 수도로서 관할 지역 내에 있는 “광역도시권 이전(conurbation transfers)”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세 번째 혜택을 받고 있다.

지역사회들은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연방보조금과 함께 지역으로 가는 산출물인 라디오-텔레비전 면허수수료를 위한 보상보조금을 받는다. 또한 플랑드르 지역사회는 고용을 위한 보조금을 받기도 하고 독일

어를 사용하는 지역사회는 소비자지수변동률과 GDP의 증가 및 학교 학생들의 증가율에 따라 매년 재계산되는 연방보조금을 받는다(자체 세입의 70%).

또한 연방구성체 간의 이전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왈룬 지역은 1993년과 1994년에 왈룬 지역으로 이전되는 부담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사회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 또한 독일어를 사용하는 지역사회는 해당 지역사회에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왈룬 지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도 한다.

1-3. 기타 세입

각 지방과 지역의 기타 세입은 2005년에 14억 유로에 미치지 못했으며, 이는 자산매각, 명문비용 및 출판물의 판매에서 비롯된 것이다.

2. 지방 정부

2005년에는 차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와 도의 총세입은 150억 유로가 조금 넘었는데, 이 중 130억 유로 이상이 지방자치단체로 갔다.

2-1. 조세 세입

2005년에 지방정부의 조세 세입은 거의 70억 유로에 달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46% 및 도 세입의 50%를 차지했다. 이러한 모든 자원들은 설령 그 일부가 국가 조세나 지역 조세에 근거를 둔 것이라 해도 자체재원 조세세입으로 생각되므로 거의 배분세입이라는 표제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상 이 후자들은 “누진소득세(surtaxes)”이지 조세수입의 “일부(fraction)”는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추가로 세가지 조세를 징수할 수 있다.

- 개인소득세에 관한 추가 상팀(centimes). 2005년에 대략 22억 유로가 걸린 누진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조세 세입의 36% 및 차입을 제외한 세입의 16%를 상회하는 액수이다. 이는 중앙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의 비율로 나타낸다. 2001년 소득세법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누진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과세기준을 축소시켰다. 2005년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찬성표를 던진 평균 세금부과율은 각각 브뤼셀-수도 지역에서 6.72%였으며, 플랑드르(Flanders)에서 7.16%, 왈로니아(Wallonia)에서 7.50%였으며, 전국평균은 7.30%였다. 왈로니아 지역의 장관 회람에는 8.8%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권고가 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렇게 했다. 이러한 형태의 권고안은 다른 나머지 두 지역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플랑드르 지역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전히 소득세누진율 0%를 유지하고 있다.

- 차량교통순환에 관한 추가 데십(decimes). 지방자치단체들은 요율에 대한 자유재량이 전혀 없다. 국

가 조세는 10%씩 증가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자동적으로 배분된다.

- 부동산에 관한 지역원천세에 대한 추가 상팀(centimes). 2005년에 대략 27억 유로가 걷힌 누진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조세 세입의 거의 44% 및 차입을 제외한 세입의 20%를 상회하는 액수이다. 지방자치단체 수령액의 변화는 토지등록세입, 해당 지역(현재 왈론 지역과 수도 브뤼셀 지역에서는 1.25%이고 플랑드르 지방에서는 2.5%)이 설정한 기초과세율과 지방자치단체가 부가한 추가 상팀(centimes)의 수에 좌우된다. 현재 지방에서는 이 세금의 면세가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도가 수령하는 조세세입 금액을 수정할 수 있다. 왈론 지방과 플랑드르 지방 모두가 최근에 기업자본지출을 자극하기 위해(예를 들면 원료 및 장비와 관련된 면세규칙에 영향을 미치는) 개혁에 착수했다. 이러한 개혁은 상실한 조세세입을 보충하기 위한 보상 메커니즘의 실행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벨기에의 지방정부들에게는 새로운 자체재원세를 창출해내는 것이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상당한 자유재량을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조세과세자가 직접 부과하는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2005년에 이러한 지방세들은 지방자치단체 조세세입의 대략 18%를 차지했다. 여기에는 오물세, 주말가정, 여가 및 레저, 행정서류전달, 서면광고에 관한 각종 세금과 법인세 등이 포함된다. 세 지방 모두가 경제개발에 우호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자체 관할 내의 지방자

치단체들과 함께 “재정평화협약(fiscal peace pact)”에 서명했다. 2005년에 도의 세금은 거의 9억 4천만 유로에 달해서 도의 총 세입의 50%를 차지했다. 그 세금의 주요부분은 부동산관련 원천세에 대한 추가 상팀(centimes)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과 마찬가지로 도 역시 지방기초세율에 추가되는 상팀(centimes)의 수를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다. 이 누진소득세는 거의 8억 유로에 달했으며, 이는 도의 조세세입의 약 85%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플랑드르를 제외한 모든 도들은 주거지역이나 삼림지역 지면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일반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기업들뿐만 아니라 가정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세금은 전반적으로 도의 정책에 의해 발생하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사용되며 플랑드르 조세 세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약 1억 유로). 지방자치단체들과 마찬가지로 도 역시 다양한 기타 자체재원세를 부과할 수 있다.

2-2. 보조금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44%와 도 재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에는 두 가지 주요한 범주가 있다.

- 지방보조금이 되는 비 양도성 일반 보조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Fonds des communes - Gemeentefonds)과 도 기금(Fonds des provinces- Provinciefonds)이다;
- 특별한 프로젝트를 위해 책정되는 보조금.

일반 보조금과 책정 보조금 간의 명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는 반면 특별 보조금은 주로 도의 경우가 우세하다(75%).

⌘ 일반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기금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징수하는 특별소비세의 폐지를 보충하기 위해 1860년에 조성되었다. 여러 지방에서는 이 기금에 대한 재분배 규칙과 함께 1989년 이래로 독립적으로 그 금액을 설정해왔다. 지방별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개혁은 재원의 안정적인 변화를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가 있었다. 플랑드르 지방에서 있었던 2003년도 개혁작업은 기존의 일부 기금들의 합병으로 이어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변화와 인플레이션 및 국내총생산에 있어서 예상실질성장률에 근거를 둔 지수를 연관시켰다.

2001년에 왈루니아 지방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에 대한 재분배 조건을 심층적으로 개혁하기 전의 과다기를 감당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직면한 점차로 증가하고 있던 재정적 어려움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 채택되었다(이른바, “계획긴장공동체(Plan Tonus communal)” - TNR 12). 이 피우리(piuri) 연간계획은 단 한번의 보조금만을 제공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개혁이 완성될 때까지 추가로 1년 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을 지속시키기 위해 2006년 1월에 부분적으로 갱신이 되었다. 지방자치

단체 기금은 2005년도에는 지역에 따라 대략 통상적인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19%에서 23% 사이를 나타냈다. 도 기금(The Provincial Fund)은 각 지역에서 매일 발생하는 경상비를 재정 보조한다. 이는 국가적인 단계에서 2005년에 2억 2백만 유로에 달했으며, 이는 통상적인 도의 세입의 11%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 목적 보조금

자치단체와 도는 많은 특별경비 프로젝트의 재정을 보조할 목적으로 설정된 보조금을 받는다.

여기에는 두 가지 주요한 범주가 있다.

- 교사들의 봉급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보조금의 운용
- 특별자본경비 프로젝트를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자본경비 보조금

2005년도에 보조금은 36억 유로를 약간 밑도는 정도였으며, 그 중 85%는 자치단체로 갔다.

2-3. 기타 세입

“부채 세입(recettes de dette- schuldontvangsten)”과 “수수료 세입(recettes de prestations - ontvangsten uit prestaties)”으로 분류되는 기타 세입은 대략 자치단체와 도 세입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수수료 세입은 지방 당국이 제공하는 현지 서비스 비용에 대한 사용자의 공헌(부모들이 학교에 납부하는 수수료와 박물관, 수영장 등과 같은 공익시설 입장료 등의 공헌)으

IV 지방공공부문 부채와 차입

로 발생하는 지방 수수료와 대략 45%에 달하는 기타 수입에 대한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채 세입은 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반복적인 재정수입이며, 이는 기타 세입의 55%에 가까운 금액이다. 이는 주로 금융 투자와(25% 지역의) 제3자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애초에 계약한 대출과 관련된 차입비용에 대한 제3자(CPAS, 교회협의회 등)로부터의 상환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나 세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간 에너지 회사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대략 30%)의 배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연방구성체

연방구성체의 부채는 2005년에 130억 유로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였으며, 이는 전체 공공부채의 4.7%와 GDP의 4.4%를 차지했다.

2. 지방 정부

자치단체와 도는 차입이 자유롭다. 특별 경비(공공 기업과 협회에 대한 투자와 주식보유)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차입에 대한 상환이 이용된다. 애써 작성한

지방정부 예산을 처리하는 지역 회람에는 때때로 특별히 차입 권고문이 삽입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왈론(Walloon) 지역의 도들은 지방 정부의 재정 상태가 급작스럽게 악화되는 상황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채 부담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바로 그 예이다.

과거에는 자치단체의 재정자산이 공공 신용기관에 투자되어야 했으며, 지역 신용은행에 투자되는 경우가 흔했다. 자치단체들은 현재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재정 파트너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일부 자치단체들과 특히 많은 대도시들의 재정상황이 악화됨으로써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과거에는 수도와 현재에는 지역에서) 긴급대출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감독 당국은 재정적인 부담을 인수하거나 최소한 그에 대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 그 대신 관련 지방 당국은 의무적으로 관리계획을 존중해야 한다.

2005년 벨기에의 지방 공공부문의 미결 부채가 대략 160억 유로에 이르렀으며, 이는 자치단체 부채 구성 비율의 90%를 약간 상회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는 GDP의 5%를 약간 상회하였으며, 유럽 평균(5.8%) 총 공공부채의 5.7%에 못 미치는 수치였다.



- 면적
43,098 km²
- 인구밀도
125명/km²
- 총인구
- 542만 명
-연간 증가율 △ 2000-2005: +0.3%
- 코펜하겐 인구
50만 명
- 도시인구
86%

SWEDEN

Baltic
Sea

GERMANY

- 10 대도시
- 수도
- Sjælland NUTS 2단계에 속함

EU 구조결속기금 (백만 유로, 2004년 금액)

2000-2006 프로그래밍 기간	688
2007-2013 프로그래밍 기간	544
- 경쟁력 및 고용촉진	452
- 영토간 협력	92

일반자료

■ 국가 조직

- 단일국가. 1849년 제헌 헌법 채택. 1953년 헌법 제 82조는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 덴마크는 1988년 2월 3일, 유럽지방자치헌장을 비준하였다.
- 입헌군주제 :
 - 단원제 의회(Foketing)는 임기 4년으로 비례대표제로 일반투표에 의해 직선된다. 최근의 선거는 2005년 2월에 실시되었다.
 - 국왕이 국가원수이다.
 - 수상이 이끄는 정부(www.denmark.dk)는 18명의 각료로 구성된다(2007년 11월 현재). 지방정부를 관할하는 정부부처는 내무복지부(www.im.dk)이다.

■ 영토 단계의 제도적 조직

덴마크는 인구 540만 명에 면적 43,100 km²로서,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이다. 국토는 유틀란트 반도와 부속 도서로 이루어져 있다. 2007년 1월 1일에 시행된 구조개혁에 따라 덴마크는 영토조직을 완전히 재정비하였다. 이로써 국가 영토행정과 지방자치정부 모두 조정이 이루어졌다.

국가영토행정

15개 주정부
(statsamter)

5개 지역행정부
(statsforvaltning)

개혁 전

개혁 후

지방 정부

13개 주
(amter)

271개 자치시(기초단체)
(kommuner)

5개 지역(광역단체)
(regioner)

98개 자치시(기초단체)
(kommuner)

개혁 전에 중앙국가는 영토단계에서 정부가 임명한 주지사(Statsamtmand)를 통해 15개 주정부(statsamter)를 통치했다. 국가는 13개 주(county)와 271개 자치시(municipality)로 이루어지는 2단계의 지방자치정부로 구성되었다. 코펜하겐(Copenhagen), 프레데릭스베르(Frederiksberg), 보른홀름(Bornholm)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두 종류의 지위를 보유했다.

2007년의 개혁에 따라 국가 주를 폐지하고 정부에서 임명하는 지역행정관(Statsforvaltnings-direkter)이 관할하는 다섯 개의 지역정부(statsforvaltning)를 설립했다. 지역정부는 가족법 문제와 관련한 대다수 임무를 국가 주로부터 인수받았다.

이 개혁에서 두 단계의 지방조직은 유지하되 각 단계의 내용은 대폭 손질하였다. 13개 주는 폐지시키고 이를 5개 지역으로 대체하는 한편, 기초자치단체(자치시)의 숫자를 271개에서 98개로 약 1/3로 축소시켰다. 코펜하겐과 프레데릭스베르가 보유하던 이중지위는 폐지되었다.

덴마크에는 또한 폭넓은 자주권을 이양 받고 특정지위를 보유한 그린란드(Greenland)와 파로 군도(Faeroes Islands)의 두 자치구가 있다. 이 두 자치구는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 지방정부협회

덴마크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방단계별로 하나씩, 두 개의 지방정부협회가 있다. 내역을 보면,
- 지방자치단체연합, 즉 LGDK(Kommuner Landsforening- KL, www.kl.dk)는 98개 자치시를 대표한다;
- 덴마크지방정부협의회(Danske Regioner, www.regioner.dk)는 5개 지역정부를 대표한다. 이 연합체는 주가 폐지된 이후 덴마크주위원회연맹(ARF)을 대체하여 설립되었다.

LGDK와 덴마크지방정부협의회는 국가 및 국제당국에 대해 지방정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이들 연합은 정치, 재무, 행정의 각 영역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협회는 매년 정부와 지방정부의 전반적인 재정체계에 대해 협상한다. 지방정부협회는 또한 경영자협회이기도 하며, 기초단체 및 광역단체의 산별노조와 협상 시 지방정부를 대표한다.

지방정부협회는 인구수에 따른 회원들의 연회비로 대부분의 재정을 지원받는다.

출처 : Eurostat

* 거시경제자료(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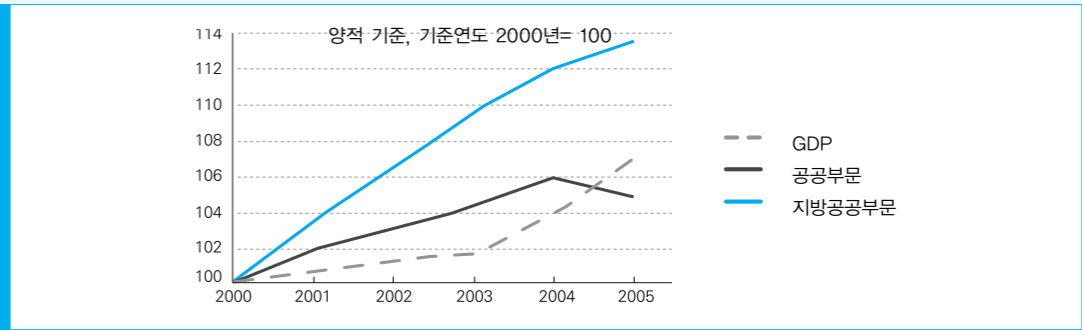
	스웨덴	EU 27개국	EU 27개국 중 순위
GDP			내림차순
백만 유로	287,267	10,990,743	11위
1인당(유로)	38,433	22,344	3위
2004-2005 변화	+3.1%	+1.8%	16위
기타 지표			오름차순
실업률(%)	4.8	8.7	4위
인플레이션 비율(%)	1.7	2.3	5위
통화	2005 환율	유로화 채택	
덴마크 크로네(DKK)	1유로 = 7.4518	채택계획 없음	

* 주요 재정지표(2005년)

	백만 유로	GDP %	공공부문 %	Δ2000-2005*
지출				
공공부문	110,609	53.1	-	+0.9%
지방 공공부문	68,721	33.0	62.1	+2.6%
GFCF				
공공부문	3,661	1.8	-	+2.4%
지방 공공부문	2,563	1.2	70.0	+4.8%
수입				
공공부문	120,330	57.8	-	+1.8%
지방 공공부문	68,027	32.7	56.5	+2.0%
예산수지				
공공부문	9,716	4.7	-	-
지방 공공부문	-698	-0.3	-	-
부채				
공공부문	75,478	36.2	-	-5.6%
지방 공공부문	10,991	5.3	14.6	+2.8%

*양적 연평균 성장

* 2000 - 2005년 공공지출변화



EU 구조결속기금

■ 2000-2006년 프로그래밍 기간

덴마크는 2000-2006 기간 동안 6억8천8백만 유로의 EU 기금을 배정받아 1인당 127 유로(2004년 금액)를 나타냈다. 덴마크는 이 중 약 60%를 국가 목표 3 프로그램(Objective 3)에, 30%는 목표 2(Objective 2) 지방프로그램(덴마크 북부의 주변지역 및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부 도서지방에 대한 지원)및 지역사회계획에 따라 나누어 썼다. 2006년 12월 현재 덴마크의 흡수율은 EU 15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57%, EU 평균은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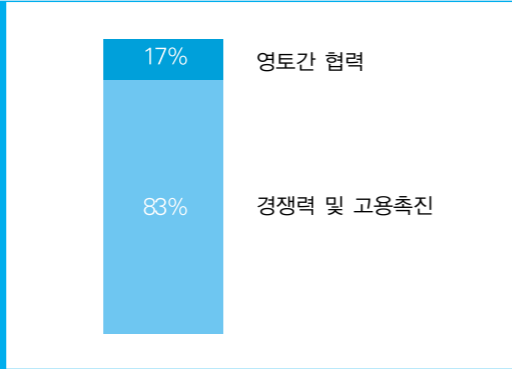
■ 2007-2012년 프로그래밍 기간

“성장, 혁신, 통합 – 글로벌경제의 덴마크 전략”이라는 이름 하에, 덴마크의 국가전략기준체계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전략성장동력”을 밝히고 있다. 즉,
– 세계수준의 교육 및 훈련시스템 창조;
– 일류 지식사회 건설;
– 첨단연구와 혁신을 통한 혁신사회 창조;
– 핵심 기업사회 건설(고성장 창업기업 확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덴마크는 EU 기금에서 1인당 100 유로에 상당하는 5억4천4백만 유로를 배정받았는데, 이는 1인당 기준으로 EU 27개국에서 가장 적은 분담금이다(2004년 금액). 연평균으로 따지면 GDP의 0.04%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액수(83%)가 2개의 운영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경쟁력 및 고용촉진 목표에 책정되었는데, 세부적으로 “혁신 및 지식”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라는 두 부문에 각각 절반씩 투입되었다. 나머지 17%는 유럽 영토협력 사업에 배분되었다.
2005년의 기업발전법(Business Development Act)과

2007년의 지방정부개혁(지역경제발전에 관한 법적 책임을 신설 광역단체에 부여)에 의거하여 새로운 통제체계를 시행하였다.
신규로 5대 지역 및 보른홀름(Bornholm)섬에 “지역성장 포럼”을 위한 사무국으로서의 지역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성장계획의 “중심점”이 되도록 하였다. 이들의 역할은 비즈니스 커뮤니티, 교육부문, 노동시장을 지방정부와 접촉시켜 구조적 지원과 프로젝트 협조금융을 장려하는 것이다.

* 목표(Objective)별 EU 기금명세



추가 정보

- Erhvervs - og Byggestyrelsen(덴마크 기업건설청) - 덴마크경제기업부: www.ebst.dk 산하.
- 글로벌 전략: www.globalisering.dk

I 지방조직 현황

1. 지방정부 단계

2005년에 덴마크에는 13개 주(amter)와 271개 자치시(kommuner)로 이루어진 2 종류의 지방정부 단계가 있었는데, 둘 사이에 계층적 연결성은 없었다. 이와 같은 편성은 19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 지방정부개혁으로 주의 숫자를 25개에서 14개로, 86개 자치구(borough)및 1 300개 구(parish)를 275개 자치시(기초자치단체)로 축소시켰다. 이어서 몇 차례 통합으로 자치시의 수는 271개로 줄었다.

이 271개 중에서 코펜하겐, 프레데릭스베르, 보른홀름의 세 자치시는 주와 자치시, 두 가지 지위를 동시에 보유했다. 2000년에 설립된 코펜하겐 광역기구(The Greater Copenhagen Authority)는 코펜하겐과 프레데릭스베르 자치시 및 코펜하겐, 프레데릭스보르그(Frederiksborg)와 로스킬데(Roskilde)주를 합병하였다. 이는 코펜하겐광역권의 지역개발을 담당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영토조직은 2007년의 공공부문개혁에 따라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다. 네 가지 변화가 뒤따랐다.

먼저 기초자치단체를 새롭게 분할하고, 13개 주는 5개 지역으로 대체하였으며, 중앙국가와 기초단체 및 지역 사이에 업무분장을 신규설정하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재정지원 및 균등화제도를 채택했다.

⌘ 개혁의 근거

2002년 10월, 덴마크정부는 행정조직위원회(Commission on Administrative Structure)를 임명하여 기존의 공공부문조직이 현대 덴마크사회의 요건에 부응하는지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 위원회는 개혁의 필요성으로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하나는 주(county)와 기초단체의 규모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며, 또 하나는 여러 영역에서 과업의 공공부문 배분이 부적절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개혁은 2005년 6월 중순 의회에서 통과되어 2007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 기초자치단체 단계

2007년의 개혁에서 덴마크는 자치시의 최소규모를

인구 20,000명으로 정했다. 이 보다 인구가 적은 기초 단체는 합병을 통해 규모요건에 들도록 유도했다. 인구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잔류할 수 있는 방법은, 자발적이면서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형태로 대형 자치시와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인구기준은 30,000명 이상의 자치시와 협력하는 조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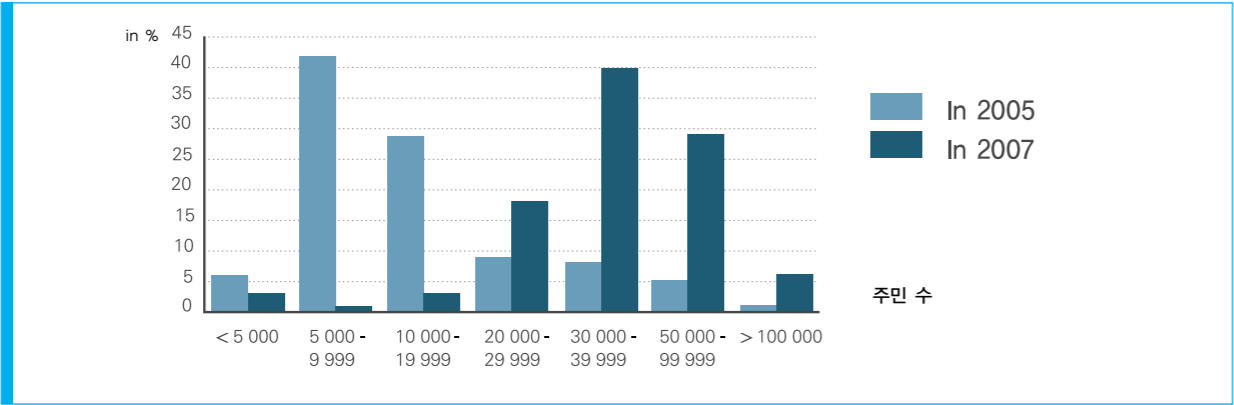
이 같은 기준으로 합병이 진행된 결과, 자치시의 수는 271개에서 98개로 축소되고, 평균 주민수는

모두 주변의 자치시와 협력계약을 체결했다.

☞ 광역자치단체 단계

2007년의 개혁은 13개 주를 폐지하고 대신 5개의 지역(NUTS 2 단계)을 설립했는데, 그 내역은 북부 유틀란트(North Jutland), 중부 유틀란트(Central Jutland), 남부 덴마크(South Denmark), 질랜드

* 2007년 전후 인구규모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내역



출처 : 덴마크 통계청

20,000명 미만에서 55,480명으로 늘어났다. 개혁 이전에는 기초단체의 절반 이상이 인구 5 000 ~ 10,000 명 이었다. 그러던 것이 개혁 후에 30,000 ~ 50,000명의 인구를 가진 기초단체가 40%에 달했다. 20,000명 미만은 현재 7곳에 불과한데, 대부분 도서지역에 소재한 자치시이다. 법정사무사항에 따라 이들 지역은

(Sealand)및 수도권(Capital Region)이다. 인구수는 60만에서 160만 명까지 분포한다. 이전의 주는 대부분 분할하지 않은 채로 광역단체(region)에 포함시켰다. 코펜하겐, 페데릭스베르, 보른홀름이 지녔던 주와 자치시의 이중지위는 폐지되었다. 2000년에 창설된 코펜하겐 광역기구 역시 없어졌다. 인구 50

만의 수도 코펜하겐 시는 이제 덴마크수도권역(Capital Region of Denmark)의 일부가 되었다. 이 지역은 페데릭스베르, 보른홀름 및 과거 코펜하겐 주, 프레데릭스보르그 주를 포함하게 됨으로써, 덴마크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160만 명)으로 탈바꿈했다.

2. 지방정부 정치제도

☞ 지방정부 정치기구

개혁 전에는 자치시와 주의 편성방식이 유사했다. 심의기관(자치시의회와 주의회)은 매 4년마다 정당명부에 의해 비례대표제로 동시에 선거가 치러졌다. 자치시와 주는 법률체계 내에서 의원 수를 각기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다(9 ~ 31명 사이). 코펜하겐 시는 예외로서 숫자가 정해져 있었다(55명). 자치시는 시장이, 주는 주지사가 각각 의장을 맡았다. 둘 다 의회의원들이 의원 중에서 선출하였다.

상설위원회(staende udvalg)의 구성원은 의회에서 의원 중에 임명하는 대표자들인데, 이들이 의회에 대한 지원업무를 제공하였다. 재정위원회(okonomiudvalg)설립은 의무사항이었다. 의회는 또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는데, 학교문제, 이주민, 고령자 등과 관련된 일부 활동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이사회에 도움을 받아 특정 프로젝트를 담당하였다. 개혁 이후에 달라진 기초단체의 정치제도는 다음 두 요소이다.
- 의회는 여전히 의원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법에 따라 인구 20,000명 미만의 기초단체는 9 ~ 31 명을, 그리고 20,000명 이상의 기초단체는 19 ~ 31명의 의원을 두어야 한다. 코펜하겐 시의회는 정족수가 55명이다.;
- 기초단체는 재정위원회 외에도 별도 상설위원회 설치가 법제화되었다. 위원회의 위원수는 홀수를 이루어야 하며, 기초의회의 의원수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개혁에 의거하여 주의회가 폐지되고 대신 매 4년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되는 정원 41명의 지역의회가 창설되었다. 최근의 지방 및 지역선거는 2005년 11월에 있었다. 새로 선출된 지역의회는 2006년에 준비위원회의 성격으로써, 신설 광역단체 창설을 준비하는 임무를 맡았다. 주의회는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2006년 말까지 존속하였다. 의회에서 의원 중에서 선출된 의장(formand)이 지역의회를 이끌어 나간다. 광역의회는 법에 따라 기초단체의 재정위원회에 상응하는 집행위원회(forretningsudvalg)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 지역위원회 의장이 집행위원회의 의장직을 맡는다. 지역의회는 그 외의 상설위원회는 없으나, 특정 프로젝트 또는 자문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시민의 지방정치활동 참여

의회는 지방의 의견수렴을 위한 지방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민참여회의를 개최하여 의회의 계획을 제시하고 대중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3. 지방정부의 책임

⌘ 권한영역

2007년의 개혁은 지방정부간의 조정뿐 아니라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심층적인 책임내역에 대해서도 조정을 단행했다. 책임이양은 다음의 두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 편성 전환과정에서 지출문제는 중립적이어야 한다;
- 기금이 책임을 뒤따라 주어야 한다, 즉 신규로 임무를 맡기는 측이 이 책임을 맡는 지방정부에 대해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개혁 전에는 의료서비스에 관한 대부분의 책임을 주(county)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아울러 중등교육, 환경보호, 교통도 주에서 책임을 맡았다. 이 같은 책임은 그에 따른 지출과 더불어 기초단체, 지역(광역단체), 그리고 중앙 정부 사이에 균등하게 재분배되었다.

기초단체의 경우, 개혁 전에 담당했던 책임사항을 그 후에도 계속 보유했는데, 예를 들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까지의 교육, 사회복지(국가를 대신하여 고령자복지, 은퇴연금 및 아동지원급여 취급, 의료비 분

할상환 등), 또한 지방공공사업과 네트워크(수도공급, 폐기물수거, 전기, 지방도로 등)및 일부 건강서비스(가정간호서비스, 학교의료 및 치과진료)가 있다. 2007년 1월이래, 기초단체는 주로부터 환경 및 계획 부문의 업무를 이관받았다. 여기에 덧붙여 교육(아동과 성인대상 특수교육), 사회복지(재정, 공급, 권한에 있어서 전적인 책임을 짐), 보건(입원 중에 나타나지 않은 재활, 예방진료, 금주 및 마약남용 치료, 치과 전문의 진료 분야에서 전적인 책임), 교통(주 도로 대부분을 책임)에서도 추가적인 책임을 맡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직업센터도 설립하여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운영할 책임이 있다. 이 같은 신규 책임이 관으로 말미암아 기초단체가 웬만한 시민관련 업무는 모두 책임지게 되었다.

지역(region)은 보건(병원서비스, 정신의학, 건강보험, 일반의 및 전문의 등), 지역개발, 사회복지(취약계층, 특별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한 주립기관의 운영) 및 지역교통(지역교통회사의 설립)을 맡았다. 개혁을 통해 중앙정부는 중등교육 및 지방도로망 일부에 대한 책임을 주로부터 이양받았다. 아울러 개혁 전에는 기초단체의 소관이었던 조세 및 세금징수에 관한 업무도 담당하게 되었다.

⌘ 지방공공기업

기초단체와 광역단체는 타 지방정부와 공조하여 스스로, 또는 민간주주와 합작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은 기업법 및 공공법규의 지배를 받는다. 기업설립 방법으로는 협동조합, 주식회

사, 유한책임회사, 또는 이윤분배회사가 있다. 지방 정부는 자체책임 하에 어떠한 활동에 대해서도 공기업을 세울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에서 자체조달이 어려운 상품과 용역의 생산 및 판매에 관련된 프로젝트도 이러한 사업이 지방의 노하우에 기반을 두고 지방책임 하에 둔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면 수행이 가능하다. 지방공기업의 주요활동영역에는 폐기물관리, 수도공급과 같은 지방공익사업을 들 수 있다.

2006년에는 지방공기업이 보유할 수 있는 지방지분의 한도에 대한 제한규정이 생겼다. 2006년 이전에는 지방정부의 일반책임범위 외에서 운영되는 기업에 대해 지분한도가 없었으나, 현재는 어떤 유형의 기업이든 49%로 제한되었다. 지방정부는 다수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기업의 지분을 2012년 1월 1일 이전에 매각해야 한다.

⌘ 기초단체간 협력

지방정부간 협력은 공공서비스 관리를 위한 공동기구의 설립, 노하우와 경험의 교환, 합작기업을 위한 노력 등과 같이 여러 가지 형태를 띌 수 있다. 광역단체의 설립이래 지역단계에 신설된 의무조항이 있는데, 광역단체 내 기초단체가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교류위원회(kontaktudvalg)를 설립해야 하는 내용이다. 위원회의 구성원은 기초의회의 각급 시장들과 광역의회의 의장인데, 이 중 광역의회 의장은 동시에 교류위원회의 의장을 맡는다. 위원회는 1년에 적어도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간의 협력증진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일차적으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 관해 지역 내 체제협력합의를 이루는 것도 위원회의 임무이다.

4. 지방정부 활동의 통제

⌘ 법적 통제

개혁 전에는 각 주에 감사회(supervisory board)가 있었는데, 이는 주의회에서 의원 중에서 선출된 네 명으로 구성되고 의장은 주지사가 맡았다. 감사회는 기초단체의 조례에 대한 법적 통제를 행사한 반면, 주의 조례는 내무복지부가 담당했다.

현재는 기초단체 및 광역단체의 조례 모두 5개 지역 행정부(statsforvaltringer)가 수행한다. 전임기관과 마찬가지로, 지역행정부는 불법이라고 판단되는 결정사항은 모두 취소시킬 수 있으며, 의무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기초/광역 의회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역행정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내무복지부에 항소할 수 있다.

⌘ 예산 및 재정통제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 및 재정통제는 개혁과정에서 손대지 않았다. 신설된 지역행정부가 승인한 감사가 계속해서 이 부문을 맡는다. 회계감사내역은 중앙정부에 필히 제출해야 한다. 법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지난 연도의 평균유동성 및 익년 예산이라는 양대 균형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II 지방공공부문 지출

● 덴마크 지방공공부문¹의 결합지출은 2005년에 687억 유로에 달했다(1인당 12 700 유로). GDP에서 차지하는 지방공공부문지출 비중(33%), 그리고 총 공공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62.1%)은 EU 최상위에 속하여, 이 나라의 높은 지방분권화 수준을 반영한다.

지방공공부문 내에서, 기초단체와 광역단체/지역의 지출은 697억 유로(결합자료일 경우는 680억 유로)를 나타냈다. 기초단체 지출 총계가 거의 500억 유로에 달해, 지방정부 지출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지방정부 지출은 기초 및 광역단체 단계에서 수행한

광범위한 업무의 결과로 경상지출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93%). 인건비는 지방정부 예산의 약 40%로서 지방정부지출의 상당부분을 점유했다. 지방정부가 고용하는 인원은 630,000명 이상으로서, 총 공공부문고용의 약 70%에 달했다.

2007년의 개혁에 따라 광역단체지출은 과거 주에서 나가던 금액에 비해 낮아지고(14%에서 9%로), 반면 총 공공지출에서 차지하는 기초단체의 지출비중은 증가(2004년의 46%에서 개혁 후 48%)할 전망이다. 중앙정부의 몫은 40%에서 43%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호, 일반공공서비스, 보건 부문이 지방

※ 지방정부 지출(2005년)

	기초단체		광역단체*		합계	
	백만 유로	%	백만 유로	%	백만 유로	%
경상지출	45,603	91.4	19,146	96.4	64,749	92.8
자본지출	4,287	8.6	708	3.6	4,995	7.2
합계	49,890	100.00	19,854	100.0	69,774	100.0

* 비결합 자료임 - 출처 : 덴마크 통계청.

※ 경제기능별* 지방공공부문 지출(2005년)

	기초단체		광역단체		합계	
	백만 유로	%	백만 유로	%	백만 유로	%
사회보호	23,761	47.6	2,778	14.0	26,539	38.0
일반공공서비스	14,605	29.3	1,892	9.5	16,497	23.6
보건	406	0.8	12,394	62.4	12,801	18.4
교육	6,822	13.7	1,775	8.9	8,597	12.3
경제업무	1,348	2.7	785	3.9	2,133	3.1
여가, 문화 및 종료	1,887	3.8	113	0.6	2,000	2.9
주택 및 지역사회 편의시설	723	1.4	10	0.0	733	1.1
환경보호	338	0.7	107	0.5	455	0.6
공공질서 및 안전	0	0.0	0	0.0	0	0.0
방위	0	0.0	0	0.0	0	0.0
합계	49,890	100.00	19,854	100.0	69,774	100.0

* COFOG 분류에 근거함 - 비결합 자료임 출처 : 덴마크 통계청.

정부의 가장 중요한 지출항목이다. 하지만 경제기능별 지출내역은 양 단계가 큰 차이를 나타낸다.

기초단체에서는 2005년에 사회보호(아동 및 노인복지, 사회복지사업 등)가 핵심 지출항목으로 총 지출의 약 과반수에 상당했다. 기초단체지출에서 사회복지의 비중은 2007 개혁으로 인해 자치시에서 이 부문의 재정, 공급, 권한 일체를 책임지게 됨으로써, 약 11억 유로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은 주 지출의 62%를 차지했었다. 2007 개혁으로 이 보건업무(병원서비스, 정신의학, 건강보험, 일반

의 및 전문의 등)는 지역에 이관되어 광역단체의 핵심임무가 되었다. 보건부문은 광역단체 운영지출의 95% 이상을 기록할 전망이다.

교육은 기초단체(14%)와 광역단체(9%)의 2005년도 제 3위 지출항목으로 나타났다. 교육지출의 비중은 아동과 성인대상 특수교육업무의 이양결과로 기초단체 예산에서 소폭(+ 2억5천만 유로) 증가가 예상된다.

중등교육이 주에서 광역단체로 이관되지 않고 중앙정부로 갔기 때문에, 광역단체는 교육지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1. Eurostat에 의하면, 지방공공부문(S1313)은 기초단체, 광역단체와 아울러, 지방정부의 국가연합과 같은 유사 지방정부조직을 포함한다.

III 지방공공부문 수입(차입 제외)

● 지방공공부문의 결합수입은 2005년에 680억 유로에 달하여, 전국 GDP의 56.5%, 총 공공수입의 32.7%를 나타냈다.

이 중 지방정부에서 걷은 수입은 670억 유로(비결합)로 집계되었다. 2005년에 지방정부수입의 50% 이상이 세금에서 들어왔다. 국가보조금은 수입의 1/4에도 못 미쳤다.

공공부문개혁의 시행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에 중대한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전의 주와는 달리, 새로 구성되는 지역(광역자치단체)은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

중앙정부의 보조금, 거기다 기초단체의 분담금을 추가하여 광역단체의 재정을 지원한다. 기초단체의 자체세원 비율은 증가한 반면, 공통세원은 대부분 폐지

* 지방정부 수입(2005년)

	자치시		주		합계	
	백만 유로	%	백만 유로	%	백만 유로	%
조세수입	22,825	49.9	12,130	57.4	34,954	52.2
-이 중 자체세수	20,987	45.9	11,592	54.8	32,579	48.7
-이 중 공통세수	1,838	4.0	538	2.6	2,375	3.5
보조금	12,556	27.4	2,664	12.6	15,220	22.7
-이 중 일반보조금	7,665	16.7	2,402	11.4	10,067	15.0
-이 중 특정보조금	4,891	10.7	262	1.2	5,152	7.7
기타 수입	10,387	22.7	6,355	30.3	16,742	25.0
-이 중 자본매각	839	1.8	16	0.1	855	1.3
-이 중 수수료	7,757	16.9	5,539	26.2	13,296	19.9
합계	45,767	100.00	21,149	100.0	66,916	100.0

* 비결합 자료임- 출처 : 덴마크 통계청.

되었다. 균등화 체계 또한 기초단체에 새로 도입되었다. 광역단체 사이에서는 균등화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1. 조세수입

조세수입은 2005년에 350억 유로로서 덴마크 지방정부 수입의 52%를 차지한다. 자치시와 주 모두 조세수입의 대부분을 자체세원에서 걷어 들였다.

2007년 개혁은 주의 조세를 폐지하고, 지역의 징세권을 허용하지 않았다. 기초단체의 두 종류 자체세원의 세율은 인상시킨 반면, 양대 공통세원의 기초단체 몫은 폐지되었다.

88 자체세수

자체세수는 2005년 지방정부의 최대 수입원(326억 유로, 즉 조세수입의 93%, 총 수입의 49%) 이다. 이는 주(county) 수입의 55%, 자치시 수입의 46%에 해당한다.

개혁 전에 자치시와 주는 각기 두 종류의 자체세금을 징수했는데, 내역을 보면,

- 자치시/주 개인소득세 (kommunal/regional indkomstskat)에서 2005년에 약 300억 유로를 징수했다. 이는 자치시(조세수입의 83%, 총 수입의 42%)와 주(조세수입의 88%, 총 수입의 51%) 공히 최대 수입원이다. 개인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이 세금은 국가에서 징수하는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기준을 따르는데, 이에 따라 국가가 전국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할 시점에 동시에 징수한다. 각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세율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2002년에 중앙정부가 세금동결을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자치시와 주에서 세율인상이 어려워졌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여전히 자체적인 세율인상을 결정할 수 있으며, 다만 타 지방정부에서 인하된 부분으로 상쇄시켜 전체적인 평균세율이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2005년의 경우, 평균세율이 자치시는 20.8%, 주는 11.9%였다. 주에서 부과하던 소득세는 개혁으로 인해 폐지되고, 이를 기초단체와 중앙국가가 양분해 가져갔다. 이처럼 기초단체 단계로 징세권이 이양됨에 따라 지방의 소득세율 인상을 초래했는데, 개혁전에 15.5% ~ 23.2%였던 것이 2007년 개혁으로 22.32% ~ 26.71 %로 상향 조정됐다;

- 자치시/주 토지세(kommunal/regionalejendomsskat)는 2005년에 280억 유로로서 자치시/주 조세수입의 7%, 즉 자치시 총수입의 3%, 주 총수입의 4%를 징수했다. 과세기준은 부동산자산에 대한 토지등록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자치시는 세율동결정책에 부응하여 중앙국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세율을 결정할 수 있다. 2007년 개혁체계에 따라 중앙정부는 세율상한선을 높였는데, 개혁 전에 0.6% ~ 2.4%(평

균 1.4%)이던 것을 2007년에 1.6%~3.4%로 상향 조정했다. 주에서 부과하던 토지세율은 1%였으나 개혁과 함께 폐지되었다.

지방토지세와 더불어 자치시는 업무전제가격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1% 징수할 수 있다. 2005년 현재 81개 자치시가 이를 시행했다. 이 세금은 개혁에서 손대지 않았다.

⌘ 공통세수

공통세수는 2005년에 24억 유로로서 지방정부 조세 수입의 7%, 총 지방수입의 4%를 차지했다. 2005년 현재 공통세원에는 아래의 세 종류가 있었는데, 지방정부는 이에 대한 재량권이 없었다.

- 부동산 임대 소득에 부과하는 부동산세 (ejendomsvaerdiskat)와 연금세(pensionskatter)의 두 세금은 자치시와 주 단계간에 배분되었다. 이 두 가지를 합쳐 2005년에 18억 유로 이상 징수했다. 상기 두 세금은 2007년 개혁으로 국가조세가 되었다;

- 기업세(selskabsskat)는 바뀌지 않았고 현재 유일한 공통조세로 남았다. 법인수입에 부과하는 기업세는 중앙정부와 자치시가 나뉘어지는데, 자치시

가 이 중 13.41%를 수령한다. 기업세의 세율(2005년에 28%)은 덴마크의회에서 결정한다. 이 세금으로 자치시에서 2005년에 5억8천6백만 유로를 징수, 세수의 3%를 나타냈다.

* 개혁 후의 조세수입 요약

이전의 주(county)와는 달리 지역(region)은 징세권이 없다. 따라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유일한 계층은 기초단체(자치시)이다. 2007년 1월 현재, 기초단체 세수는 다음의 네 종류 세금에서 들어온다.

- 지방개인소득세 : 기초단체의 세율이 인상됐다. 개혁 전에 15.5% ~ 23.2%였으나 2007년에는 22.32% ~ 26.71% 범위로 바뀌었다;
- 지방토지세 : 중앙정부에서 이 부문의 세율을 인상하여 개혁 전에 0.6% ~ 2.4%이던 것이 2007년 이후 1.6% - 3.4%로 개정되었다;
- 업무전제가격에 대한 재산세는 최대 1%로서 변동이 없다;
- 기업세의 일정 몫.

연금세와 부동산세에서 차지하는 기초단체의 몫은 폐지되어 현재는 이들 세금에서 나온 수입이 모두 중앙정부로 귀속된다

2. 보조금

국가보조금은 2005년에 152억 유로, 즉 지방정부 수입의 23%에 달했다. 기초단체 계층에서 보조금

의 80% 이상을 수령하여 기초단체 수입의 27%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국가이전 세수로 주(county)에 지급되는 것은 주 수입의 13% 미만이었다.

2005년의 국가보조금에는 지방정부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형평화교부금으로서 자치시와 주 모두 수령하는 일반보조금과 그 외의 몇 가지 특정보조금이 있다. 개혁에서 균등화정책은 조정을 가했으나, 일반 및 특정보조금은 거의 손대지 않았다.

국가의 일반보조금 및 형평화교부금을 합쳐 2005년에 100억 유로(자치시에 77억 유로, 주에 24억 유로)가 들어옴으로써, 지방정부 보조금 수입의 66%, 총 지방정부 수입의 15%에 달했다.

⌘ 일반보조금

일반보조금(generelle tilskud)은 지방당국의 과세기준을 근거로 지방정부 사이에 배정된다. 보조금 액수는 덴마크재정부가 매년 지방정부협회와 협상을 거쳐 결정한다. 연간 변동률은 아래와 같은 요인을 감안한다.

- 당해 연도에 취해진 입법조치로 인하여 지방정부에 미친 재정적 영향;
- 정부 사회정책의 영향;

- 2년간 물가 및 임금 변동;
- 지방지출과 평균세율 변동이 감안된 연간 권고안을 기초로 하여 지방정부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소요 재정자원.

⌘ 형평화교부금

2005년의 형평화교부금(udligning)은 지방정부의 지출수요와 1인당 과세기준을 모두 고려하여 지급되었다.

“지출수요형평화” 장치는 인구통계 및 사회적 기준에 따라 지방정부 사이의 지출 불균형을 상쇄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 덴마크 평균을 상회하는 지출이 필요한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국가평균 이하 지방정부로부터 나온 분담금을 가지고 재정을 지원해 주었다. 지방정부의 1인당 수요와 국가평균 사이의 격차를 뽑아 그 차액에다 형평화 비율 및 주민수를 곱하여 지방정부의 보조금 또는 분담금을 산출해 낸다. 이에 따라 자치시에는 45%(코펜하겐 광역권 자치시는 40%), 주에는 80%가 형평화 비율로 산정되었다.

과세기준 형평화교부금도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지원되었는데, 국가평균 이하 과세기준의 지방당국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국가평균 이상의 지방당국에서

나오는 분담금을 가지고 지급했다. 과세기준을 살펴보면, 자치시는 토지세 과세기준으로 소득세과세 기준 + 6.5%에서 결정하고, 주의 경우는 소득세와 토지세 세수를 합쳐서 세율로 나눔으로써, 양 계층이 서로 달랐다.

국가적 단계로 보자면, 자치시와 주에 대해 각각 한 종류의 형평화교부금이 지원되는데, 각 주별 1인당 과세기준과 국가차원 주 평균자료와의 편차에 대해서는 80%를 균등화시키는 반면, 자치시 1인당 과세기준과 국가차원 자치시 평균자료와의 편차에 대해서는 45%를 균등화시켜 지급하였다. 아울러 국가차원 평균과세기준의 90% 미만의 1인당 과세기준을 갖고 있는 자치시에 대해서는 보조형평화교부금이 지급됐다. 코펜하겐 광역권의 자치시는 이 지역 1인당 과세기준 차액의 40%에 상당하는 형평화교부금을 추가로 수령했다.

이와 같은 균등화장치는 2007년의 개혁에서 조정되었다. 2007년 1월 이후부터는 균등화장치가 지출수요와 예상세수(58% : 예상 평균세율을 근거로 함)사이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와 아울러 코펜하겐 광역권 자치시 사이에는 추가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불리한 자치시에는 보조금 분담금을 지원한다.

광역단체에 대해서는 이 같은 균등화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 개혁 후의 보조금제도 요약

개혁이 가져온 변화로 균등화장치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나 기초단체가 수령하는 일반보조금 및 특정보조금은 바뀌지 않았다. 이로써 자치시 균등화장치를 요약하면, 덴마크 전체 자치시에 지급하는 국가형평화교부금, 코펜하겐 광역권 자치시간의 특정형평화교부금, 그리고 불리한 자치시에 지급하는 보조금분담금이 있다. 신규로 창설된 5개 지역에 대한 균등화장치는 없다.

⌘ 특정보조금

특정보조금은 2005년에 50억 유로에 달해, 지방정부 수입의 8%를 기록했다. 특정보조금이 지원된 곳은 거의 대부분 자치시로서(49억 유로), 자치시 보조금 수입의 39%, 총 자치시 수입의 11%에 해당한다. 2005년에 기초단체에 배정된 특정보조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제반 특정보조금(saerlige tilskud) : 지리, 사회, 재정적 기준(경제난에 처한 자치시, 교량이 없는 도서지방 소재 자치시에 대한 보조금 등)을 근거로 함;
- 사회보장지출의 상환(refusioner) : 연금과 아동복지로 나간 지출에 대해서는 전액 자치시에 상환처리, 그 외에 대해서는 일부 상환처리, 즉 사회보장카드가 없는 실업자 현금지원(50%), 병가 중 급여(병가

기간에 따라 0%에서 100% 사이)및 주택보조금(50%에서 75% 사이);

-VAT 납부대금 보상에 지급되는 보조금. 상기 특정보조금은 개혁 후에도 변동이 없는 항목이다. 단, VAT보상 보조금은 폐지하고 대신 국가가 직접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대체되었다.

※ 2007년 이후의 광역단체재정

광역단체는 조세권이 없다. 중앙정부 보조금과 기초단체 보조금에서 광역단체의 재정을 지원한다. 광역에 지급되는 자금은 해당활동에 따라 달라진다.

보건지출은 중앙국가와 기초단체에서 수령하는 보조금을 통해 지원받는다.

- 보건지출의 대부분(약 80%)은 중앙정부가 지급한다. 이 자금은 전국적으로 부과되는 의료서비스분담금에서 나오는데, 이 분담금은 8%의 고정세율이며 이 중 일부는 과거 주 소득세 세수를 대체하는 역할이다. 광역단체는 지역 지출수요(인구통계, 사회구조 등)에 따라 배분되는 포괄국고보조금(의료서비스 수입의 75%) 및 관내 병원의 활동수위 향상을 촉진하는 활동관련 국고보조금(5%)을 지급받는다;

3. 기타 수입

기타 수입은 2005년 지방정부에 167억 유로를 가져다 주었는데, 이는 지방정부 수입의 25%에 상당했다. 택 아시설과 같은 지방서비스 및 수도, 난방과 같은 공익사업에 부과되는 요금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130억 유로).

- 기초단체는 광역단체 의료서비스지출의 약 20%를 지원한다. 하나는 법률로 1인당 최대한도 130 유로에 정한 지역의 지방기초분담금(10%)이고 또 하나는 각 기초단체의 의료서비스 사용량을 기초로 한 활동관련 지방분담금(10%)이다.

사회복지사업 및 특수교육 지출은 광역단체가 기초단체를 위해 수행한 활동업무에 대해 기초단체가 부담한다.

기타 광역단체 과제(주로 개발과제)를 위해 지원되는 자금에는 포괄국고보조금과 개발분담금이 있는데, 포괄보조금은 목표기준(objective criteria)을 근거로 배정해 주고, 개발분담금은 인구비례(1인당 17 유로)로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 부과한다.

IV 지방공공부문 부채와 차입

- 중앙정부가 규정한 차입관련 법체계가 비교적 엄격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차입선택권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 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특정 상황(예, 유동성 문제) 하에서는 내무복지부의 차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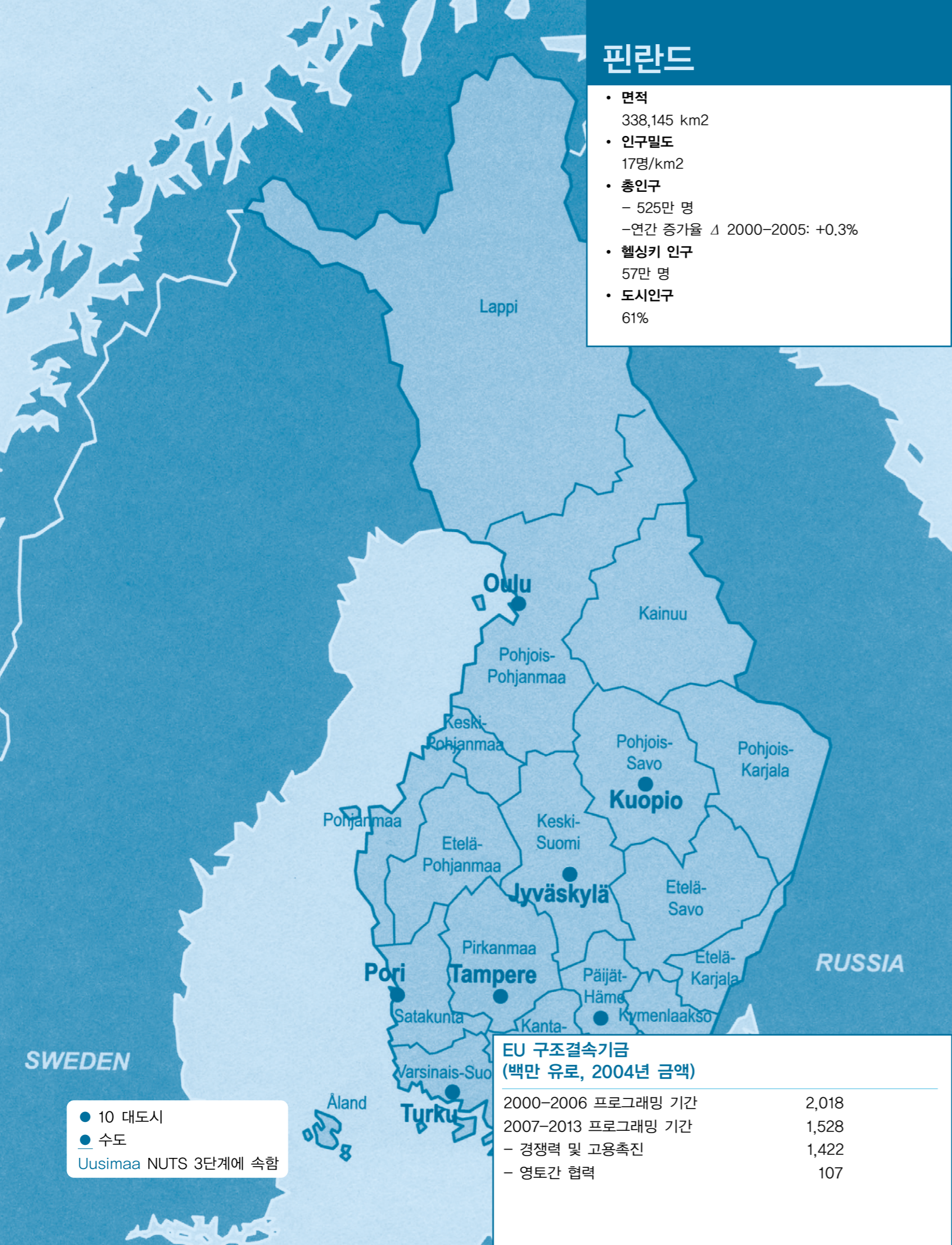
기초단체는 자국통화든, 외국통화든 결정만 내리면 차입을 일으킬 수 있다.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으나, 이는 좀처럼 시행하지 않는다. 기초단체의 차입은 부채상환 및 특정 유형의 자본지출(전력공급, 하수도망, 생활쓰레기, 고령자 주택건설, 공공지원주택 및 소방서비스)에 한해 허용된다.

그 외 목적으로 차입할 경우 반드시 내무복지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초단체 대출관련 법체계는 2007년 개혁 이후에도 변동이 없다.

상위 지방단계에 대한 대출규정은 개혁 시 손을 보았다. 대출이 투자지출의 25%(2003년, 2004년에 병원부문의 경우 5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주(county) 시절에는 어떠한 종류의 투자지출관련 차입이 가능했었으나, 지역(region)으로 편제가 바뀌면서 이것이 일





핀란드

- 면적
338,145 km2
- 인구밀도
17명/km2
- 총인구
- 525만 명
-연간 증가율 △ 2000-2005: +0.3%
- 헬싱키 인구
57만 명
- 도시인구
61%

Lappi

Oulu

Kainuu

Pohjois-Pohjanmaa

Keski-Pohjanmaa

Pohjanmaa

Etelä-Pohjanmaa

Keski-Suomi

Kuopio

Pohjois-Savo

Pohjois-Karjala

Jyväskylä

Etelä-Savo

Pori

Tampere

Pirkanmaa

Päijät-Häme

Kymenlaakso

Satakunta

Kanta-

Varsinais-Suomi

Turku

Åland

RUSSIA

SWEDEN

- 10 대도시
- 수도
- Uusimaa NUTS 3단계에 속함

EU 구조결속기금

(백만 유로, 2004년 금액)

2000-2006 프로그래밍 기간	2,018
2007-2013 프로그래밍 기간	1,528
- 경쟁력 및 고용촉진	1,422
- 영토간 협력	107

일반자료

■ 국가 조직

- 단일국가. 1919년 제헌 헌법 제 51조 및 2000년 통과된 현행 헌법 제 121조에 의거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함.
- 핀란드는 1991년 6월 3일 유럽지방자치헌장을 비준하였다.
- 의원내각제 공화국:
 - 단원제 의회(Eduskunta)는 임기 4년으로 비례대표에 따라 보통,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최근의 선거는 2007년 3월에 실시되었다.
 - 핀란드공화국 대통령은 임기 6년으로 보통,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최근의 선거는 2006년 1월에 실시되었다.
 - 수상이 이끄는 정부(www.government.fi)는 20명의 각료(2007년 4월 현재)로 구성된다. 지방정부를 관할하는 정부부처는 현재 내무부(www.intermin.fi)이나, 2008년 이후 재무부(www.vm.fi)로 이관된다.

■ 영토 단계의 제도적 조직

핀란드는 EU에서 5번째로 영토가 큰 나라(약 340,000 km2)이지만, 인구는 520만 명 으로서 대부분 이 나라의 남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동시에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국가이기도 하다.

국가영토행정상 핀란드는 6개 도(läänit: province)로 나뉜다. 공화국 대통령이 내각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임기 최장 8년의 도지사(maaherra)가 도를 운영한다. 국가 지방 사무국(Provincial State Office)의 수장으로서, 도 지사는 교육, 문화, 사법, 보건 및 사회복지 부문에서 국가정책을 조정한다.

핀란드는 416개의 지방자치단체(municipality)에 의한 단일계층의 지방정부로 이루어진다. 특별한 법적지위를 보유한 영토가 두 곳 있는데,

- 올란드(Åland) 제도는 자치행정권을 보유한다;
- 카야니(Kainuu) 지역은 자치정부 시범구역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임시자치권을 부여한다.

국가영토행정

6개 도(province)
(läänit)

지방 정부

416개 자치시(지방자치단체)
(kuntaa)

■ 지방 정부 협회

핀 란 드 지 방 자 치 단 체 연 합 (Kuntaliitto, www.kunnat.net)은 국가와 국제단계에 대해 핀란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또한 이 연합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대상은 병원구역(hospital district), 공동당국(joint authority) 및 핀란드의 19개 지역의회를 포함한다.

지자체의 임무, 재정, 행정에 관한 모든 협상 시 핀란드 지방자치단체연합이 국가와의 중간 역할을 담당한다. 국가와 협력하고 재무부의 감독아래, 이 연합은 지자체 재정의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연례적인 분석을 실시한다.

상기 분석은 국가의 예산안 초안준비에 활용된다. 전술한 지자체연합은 또한 현정부에 의해 임명되는 행정실무진의 구성원으로서, 기초서비스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목표는 서비스 가용성의 향상, 재정서비스 수단의 검토, 국가와 지자체간 협력의 증진이다.

출처 : Eurostat

＊ 거시경제자료(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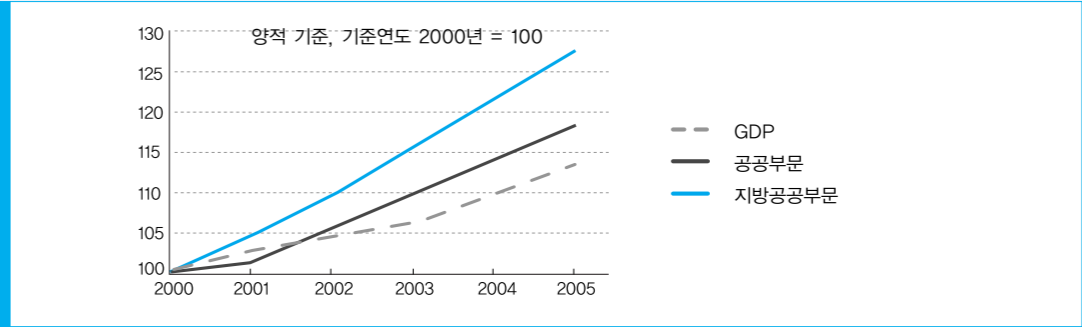
	핀란드	EU 27개국	EU 27개국 중 순위
GDP			내림차순
백만 유로	157,162	10,990,743	14위
1인당(유로)	29,964	22,344	7위
2004-2005 변화	+2.9%	+1.8%	18위
기타 지표			오름차순
실업률(%)	8.4	8.7	18위
인플레이션 비율(%)	0.8	2.3	1위
통화	2005 환율	유로화 채택	
Euro	-	2002년 1월 1일	

＊ 주요 재정지표(2005년)

	백만 유로	GDP %	공공부문 %	Δ2000-2005*
지출				
공공부문	79,338	50.5	-	+3.4%
지방 공공부문	31,277	19.9	39.4	+5.0%
GFCF				
공공부문	4,125	2.6	-	+3.4%
지방 공공부문	2,724	1.7	66.0	+5.2%
수입				
공공부문	83,332	53.0	-	+1.7%
지방 공공부문	30,256	19.3	36.3	+4.0%
예산수지				
공공부문	4,292	2.7	-	-
지방 공공부문	-1,021	-0.7	-	-
부채				
공공부문	65,053	41.4	-	+1.4%
지방 공공부문	8,297	5.3	12.8	+8.5%

*양적 기준 연평균 성장

＊ 2000 - 2005 공공지출 변화



EU 구조결속기금

■ 2000-2006년 프로그래밍 기간

핀란드는 2000-2006 기간 동안 **20억2천만 유로**의 EU 기금을 배정받아 **1인당 385 유로**(2004년 금액)를 나타냈다. 핀란드는 이 돈을 목표 1(Objective 1: 핀란드 북부 및 동부)에 39%, 목표 2(Objective 2)에 27%, 그리고 나머지는 목표 3(Objective 3) 및 지역사회계획에 따라 나누어 썼다. 2006년 말 현재 **핀란드의 EU 구조 기금 흡수율은 72%**로 EU 15개국 평균(68%)에 비해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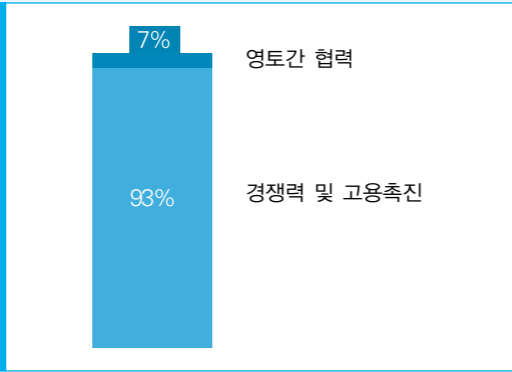
■ 2007-2012년 프로그래밍 기간

핀란드 전략기준체계는 네 가지 목표에 중점을 둔다. 즉,
- 비즈니스 촉진;
- 혁신, 네트워킹 및 지식 구조의 증진;
- 능력, 노동, 고용 및 기업가정신;
- 지역접근성 및 환경의 개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핀란드는 EU 기금에서 **1인당 291 유로**에 상당하는 **15억3천만 유로**를 배정받음으로써, 2000-2006년 기간과 비교하면 약 24% 정도가 감소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이는 **핀란드 GDP의 0.14%**에 해당한다(2004년 금액). 대부분의 기금(93%)이 핀란드 전역을 포함하는 지역경쟁력 및 고용촉진 목표에 책정되었다. 아울러, 핀란드의 동부 및 북부 변경지대는 인구희소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에 따라 지원이 제공되었다. 나머지(7%) 재원은 러시아, 에스토니아, 스웨덴, 노르웨이 및 “발트해 협력” 프로젝트와 같은 영토협력계획에 배정되었다. 핀란드는 **7개의 운영프로그램(OP)**을 설정하였다. 즉,
- NUTS 2 단계에서 “주요 지역”을 위해 5대 지역 OP;
- 핀란드 본토 및 올란드(Aland) 제도에 대한 2대 테마 OP.

기금관리는 내무부와 노동부에서 담당하며 중앙과 지방을 결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역의회(NUTS 3 단계) 차원에서 지역 OP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주요 지역”의 타 지역구성원으로부터 동의를 받는다. 지역단계에서는, 19개 지역관리위원회(RMC)가 OP의 시행 및 감시를 담당한다. 올란드(Aland) 제도는 고유자치권에 따른 자체적인 우선권과 관리방식을 보유한다.

* 목표(Objective)별 EU 기금명세



추가 정보

- 내무부, 지역개발부(ERDF): www.intermin.fi
- 노동부, 구조기금팀(ESF): www.mol.fi
- 올란드 제도 관련: Aland 지역정부: www.regeringen.ax

I 지방조직 현황

1. 지방정부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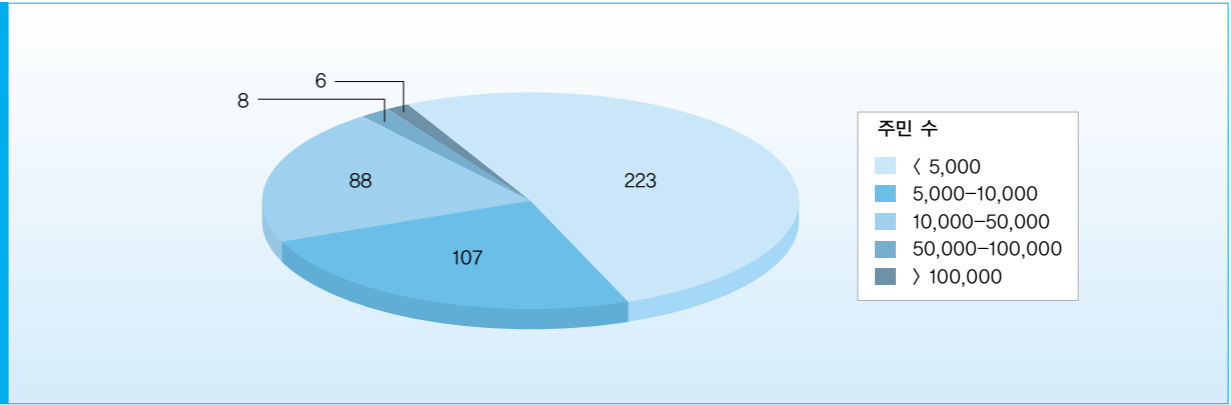
핀란드는 자치시(municipality) 한 종류 단계의 지방 자치정부만 보유한다. 지난 수십 년간 자치시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1976년의 475개에서 2005년에는 432개, 그리고 2007년엔 415개로 줄었다.

자치시의 인구는 평균 12,660명이며, 자치시의 절반

이상이 인구 5,000명 미만이다. 인구 100,000명이 넘는 곳은 수도 헬싱키(565,000명), 에스포(235,000), 탐페레(206,000)를 비롯, 6곳에 불과하다. 헬싱키 광역권은 11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핀란드 전체 인구의 약 20%에 달한다.

올란드(Åland) 제도는 1920년의 자치법(Autonomy Act) 통과 이래 별도의 자치행정부를 갖고 있다. 상기 비무장 스웨덴어 사용지역은 자체 의회(lagtinget)

* 2007년 전후 인구규모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내역



와 지방정부(landskapsregeringen)를 두고 관리한다. 올란드의 주민 수는 26,200명이며, 16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다. 주요 도시는 마리에함(Mariehamn)으로서, 섬 주민의 40% 이상이 거주한다.

핀란드는 19개 도의회(maakunta)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자치정부는 아니지만 법정지자체협력위원회로서 지역개발 및 지역계획당국의 역할을 수행한다. 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도의회에 소속된다.

✱ 지방정부 및 서비스 구조조정

지방자치단체 행정은 1995년 도입되어 2006년 최종 개정된 지방정부법 (Local Government Act)에 근거를 둔다. 핀란드의 공공서비스 제공은 매우 지방분권적이다. 실질적으로 이 복지국가는 전적으로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자치시가 보유하는 책임영역이 EU에서 가장 광범위한 국가 중의 하나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기초 직업교육 제공의 경우 50,000명을 한도로 정했다. 전문의 의료보호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공동방식으로 전국을 분할하였다. 따라서 자치시의 경계를 재설정하고(구조조정법에 따르면, 합병 지자체에 대해 교부금이 배정됨), 지자체 파트너 지역을 수립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요건 충족을 위한 조치가 의무사항이 되었다.
많은 자치단체가 인구가 적고 인구밀도가 낮은 실정을 고려할 때, 이 같은 폭넓은 책임은 때로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 핀란드 정부는 2005년 파라스 프로젝트(PARAS)를 출범시켜, 지리적 다양성 및 노령화와 같은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민에게 고품질 자치단체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지방정부 및 서비스 구조조정 을 단행하였다.	구조조정법 제 11조는 지방정부재정 및 중앙정부의 대 지방정부 이전수지 제도에 대해 전면적인수정을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자체 세수기준을 강화하여 특정 행정부처로 배정된 중앙정부 이전수지를 병합시킴과 아울러, 재정지원제도가 지자체 합병 및 협력을 위촉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2007년에는 지방정부 및 서비스 구조조정법 이 발효되었다. 이 법은 한시적으로 2012년 말까지만 시행된다. 법률의 목적은 기초 지방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인구요건을 정하는 것이다. 주민수 20,000명이 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또는 파트너 지역에서 1차 의료서비스 및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이 법률은 또한 몇 가지 과제(예, 자치단체 소비자권고법, 후견인서비스법)에 대한 조직 및 재정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로 이관시켰다. 이 같은 이양조치는 2009년 1월 안으로 완료된다

2005년 이후 7년간 카야니(Kainuu) 지방은(지자체가 10개, 주민수 85,000명) 자치정부 시범지역 프로그램에 참여해왔다. 지방의회 의원은 4년 임기로 민주주의적 선거방식으로 선출된다. 이 시범지역은 전통적인 국가영도행정의 영역뿐 아니라,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업무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업무를 책임진다.

행정 운영에 책임을 진다. 이 위원회가 시의회의 결정을 준비 및 시행한다.

시장(municipal manager)은 시의회에서 임명하는 집행기구이다. 시행정의 수장으로서, 시장은 시 집행위원회 권한에 의거하여 행정서비스 운영과 지방재정관리를 담당한다. 2006년에 있는 지방정부법 개정 이후, 임명직 시장 대신에 선출직 시장을 집행부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2. 지방정부 정치제도

☞ 지방정부 정치기구

시의회(kunnanvaltuusto)는 심의기구이다. 의원수는 지자체의 규모에 따라 17명에서 85명까지 다양하다. 시의원은 매 4년마다 비례대표로 선출된다. 다음 선거는 2008년에 치러진다. 시의회는 의원 중에서 의장과 함께 1명 이상의 부의장을 각각 선출한다. 다양한 종류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의회를 지원하는데, 위원회의 위원은 시의회에서 임명한다. 자치단체들은 대부분 보건, 문화, 사회복지 부문에서 위원회를 구성한다.

☞ 시민의 지방정치활동 참여

자치시는 시의회 회의를 일반에게 공지해야 한다. 의회는 또한 시의 결정에 관해 시민의 의사표현을 허용해야 한다.

의회의 주도하에, 또는 유권자의 5%가 발의하는 경우에는 지방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는 재정에 관한 자치시

시민들은 또한 의회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데, 의

회는 이를 6개월 내로 심의해야 한다. 등록 유권자의 최소 2%가 발의해야 청원이 가능하다.

3. 지방정부의 책임

☞ 권한영역

핀란드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며, 시민에 대한 기초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시에 폭넓은 책임을 부여한다. 자치시의 주요책임으로는 보건(예방 및 1차 의료서비스, 전문의 의료서비스 및 치과 진료), 사회복지(아동 탁아사업, 고령자보호, 장애인 서비스 등을 포함한 일체의 기초 사회복지서비스), 교육(교사 임금지급을 포함, 고등학교 교육까지), 지방공익사업 및 네트워크(수도 및 에너지 공급, 폐기물 관리, 도로 유지보수, 도시 대중교통 등) 및 경제개발(특히 산업 및 상업활동 증진)이 있다.

자치정부 실험 중인 카야니(Kainuu) 지방의 경우, 비록 재정은 여전히 자치시가 책임지지만, 복지정책(보건, 사회복지, 교육)이 자치시에서 지역(region)으로 완전히 이관되었다. 지역은 이로써 지역계획 및 개발, 산업정책뿐만 아니라 경제 및 고용개발센터, 도로국, 지방정부, 삼림센터, 환경센터와 같이 전통적인 국가영토행정 영역에 대한 권한까지 포함, 자체개

발에 관한 모든 임무를 부여받았다. 지역에서 EU 구조기금의 시행을 비롯하여 자원배정에 관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또한 보유하고 있다.

☞ 지방공공서비스 관리 및 자치단체간 협력

자치시는 공공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지방당국은 자치시 내부기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워낙 관할지역이 넓고 인구밀도는 낮기 때문에 다른 자치정부와 협력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서비스 제공 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은 특수목적 공동시정부(Special-Purpose Joint Municipal Authority)로서, 이는 전문의 의료서비스, 장애인 전문 진료, 화재 및 구조서비스, 지역개발과 같은 특정영역에서는 의무사항이기도 하다. 공동시정부의 운영은 의회와 집행부가 담당하는데, 의회는 심의기관으로서, 의원은 구성원인 자치시에서 임명하며, 집행부는 집행위원회를 칭하는 이름이다. 재정지원은 국가 교부금과 수수료, 그리고 회원 자치시에서 충당한다. 핀란드는 2005년 현재 230개의 특수목적 시정부연합이 있는데 대부분 교육, 사회, 보건서비스 분야에서 운영된다.

지역개발활동은 1994년에 설립된 일명 지역의회

“regional council”라는 19개 지역 자치시 상호조직에서 수행한다. 지역의회는 지역개발과 계획 및 EU 구조기금 시행을 주요 임무로 한다. 이 같은 법정책임과 더불어, 지역의회는 흔히 관광, 경제발전계획, 환경관리 및 문화활동에도 개입한다.

자치시는 또한 선택에 따라 지방공기업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자치시가 완전히 소유하여 공법상 지위를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법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공기업은 대체로 지방공익사업 및 네트워크(수도공급, 폐기물 관리, 전기와 가스, 도시난방 등) 부문에서 운영된다.

4. 지방정부 활동의 통제

☞ 법적 통제

국가지방사무국(maaherra)의 국장은 자치시가 법률적 책임을 수행하며 직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감독할 의무를 진다. 1995년의 지방정부법은 자치시 또는 자치단체간 협력기구에서 내린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항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 같은 불복청구는 도 법원과 최고행정법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하여, 때에 따라 자치시가 내린 결정을 번

복할 수 있다. 자치단체간 협력기구에 속하는 자치시 역시 해당 협력체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 예산 및 재정통제

자치시 예산의 통제는 두 가지 채널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자치시 행정관련 내부감사위원회, 또 다른 하나는 의회에서 임명한 1인 또는 다수의 외부감사가 수행하는 임기 중의 재무감사이다. 감사는 매년 1회씩 감사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감사는 불일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시 자치시 집행위원회에도 보고해야 한다.

지방정부법 통과와 2006년 8월의 일부 수정 이후, 자치시는 예산균형요건 충족이 의무화되었는데이에 따라 회계연도 4년간에 걸쳐 균형재정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기초단체는 또한 대차대조표에 보유중인 적자는 의무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

II 지방공공부문 지출

- 핀란드 지방공공부문1의 지출은 2005년에 313억 유로에 달하여, 1인당 5,960 유로로서 EU에서 1인당 지출이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다.

지방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19.9%), 그리고 총 공공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39.4%) 역시 EU 최상위에 속한다.

* 유형별 지방정부 지출(2005년)

	백만 유로	%
경상지출	28,793	92.0
- 이 중 인건비	15,796	50.5
자본지출	2,487	8.0
합계	31,280	100.0

* 출처: 국가회계, 핀란드 통계청.

지방공공부문 지출은 대부분 경상지출(92%)로 전용된다. 이 같은 절대적 우세현상은 인건비에서 기인하는데, 인건비는 경상지출의 72%, 지방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핀란드는 자치단체의 책임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지방부문 고용자의 숫자가

매우 많다. 자치시는 2005년에 약 426,000명의 인원을 고용하여 총 공공부문 종업원 수의 77%, 핀란드 총 노동력의 17%를 나타냈다.

* 경제기능별 지방공공부문 지출*(2005년)

	백만 유로	%
보건	8,872	28.4
사회보호	7,273	23.3
교육	6,397	20.4
일반공공서비스	4,387	14.0
경제업무	1,914	6.1
여가, 문화 및 종교	1,434	4.6
공공질서 및 안전	647	2.1
환경보호	219	0.7
주택 및 지역사회 편의시설	134	0.4
방위	3	0.0
합계	31,280	100.0

* COFOG 분류에 근거함 - 출처: 국가회계, 핀란드 통계청.

자본지출의 몫은 25억 유로로서, 지방공공부문 지출의 8%를 기록했다.

보건과 사회복지는 핀란드 자치시 지방공공부문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이 두 부문이 지방공공부문 지출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공공부문 고용의 과반을 상회한다. 보건과 사회복지는 대체로 단일기관에서 개발을 책임지고 있다. 일부 자치시는 보건과 사회복지 행정을 결합하여 서비스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

보건 부문에서 자치시는 예방 및 1차 건강진료, 전문의 의료서비스, 치과서비스(17세까지 무상진료) 및 학교 보건을 책임진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보건소는 246 개소인데, 190곳은 자치시 소속으로 일반 및 예방진료를 제공하는 반면, 56곳은 시정부연합체에 속하여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카야니 지방은 지역단위의 보건서비스를 위해 실험이 진행 중이다.

사회복지 부문에서 자치시는 아동 탁아서비스, 아동 보호, 고령자보호(가정지원 서비스, 퇴직자 수용시설 관리, 부대서비스, 가정관리), 장애인 서비스(간호, 기금, 주택)를 책임진다. 2006년에 노동시장지원을 위한 재정 (실업일수 500일 이상 인구에 대한 실업지원)은 국가의 전담책임에서 국가와 지자체 공동부담으로 바뀌어, 자치시도 50%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처럼 자치시가 신규업무를 맡게 되면서 국가는 지자체와 개별협상을 통해 해당 자금을 보상한다.

교육은 지방공공부문 지출의 제 3위(20%) 지출항목이다. 자치시는 교사급여 지급과 학교건물의 신축 및

유지보수를 포함, 취학 전부터 중등교육(일반학교와 직업학교 모두 포함)까지 담당한다. 직업교육은 기본적으로 자치시정부연합에서 제공한다. 자치시는 또한 평생교육제공 성인교육센터뿐 아니라, 전문성 위주의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핀란드 29개 기능대학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교육부문의 재정은 자치시와 국가가 공동으로 지원한다.

1. 지방공공부문은 자치시 예산 또는 자치시연합기구가 재정을 지원하는 일체의 기관단체, 그리고 자치시, 자치시연합기구가 포함된다.

III 지방공공부문 수입(차입 제외)

● 차입을 제외한 지방공공부문의 수입은 2005년에 303억 유로에 달하여, 핀란드 GDP의 19.3%, 총 공공부문수입의 36.3%를 나타냈다.

* 지방공공부문 수입(2005년)

	백만 유로	%
조세수입	14,303	47.30
- 이 중 자체세수	13,113	43.3
- 이 중 공통세수	1,190	3.9
교부금	8,245	27.2
기타수입	7,711	25.5
합계	30,259	100.0

* 출처: 국가회계, 핀란드 통계청.

핀란드의 지방재정제도는 매우 지방분권적이다. 즉, 조세수입이 지방공공수입부문 수입의 과반이 넘고 거의 전적으로 자체세수에서 들어온다. 수입의 1/4은 국가교부금에서 지원받는다.

1. 조세수입

조세수입은 2005년에 143억 유로로서, 지방공공부문

수입의 47%를 차지한다. 자치시는 조세수입으로 자치단체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 자체세수

2005년의 자체세수는 131억 유로로서, 이는 지방 조세수입의 92%, 차입을 제외한 지방수입의 43%에 해당했다. 1993년의 소득세법은 지자체 소득세와 부동산세의 두 가지 자체세원을 확보해 주었다.

지자체 소득세(kunnallisvero)는 최대의 수입원이다. 2005년의 징수액은 125억 유로에 달하여, 자치시 세수의 87%, 총수입의 41%에 상당했다. 자치시는 세율을 연례적으로 독자적으로 인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한선도 없는 등, 세율에 대해 완전한 자율권을 행사한다. 2005년의 평균 세율 분포는 16%에서 21% 사이로, 평균 18.29%로 집계됐다.

부동산세(kiinteistovero)는 2005년에 7억 유로 이

상을 견어들여, 자치시 세수의 5.1%, 자치시 총수입의 2.5%에 해당했다. 부동산세는 재산의 토지등록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삼림과 농업용 토지만 제외하고 모든 부동산재산에 과세한다. 법률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자치시는 세율을 결정할 수 있다. 세율은 재산의 유형(영구 주거지, 2차 주거지 등)에 따라 달라진다.

☞ 공통세수

공통세수로 지방공공부문에 확보된 액수는 2005년에 약 12억 유로로서, 조세수입의 8%, 총수입의 4%를 점유했다.

공통세수는 기업소득세(osuus yhteisoverosta)에서 들어오는데, 이는 국가가 징수한 다음, 국가, 자치시, 그리고 교회 교구2로 분배되는 방식이다. 국가는 2005년에 기업소득세 세입에서 76.03%를, 자치시가 22.03%, 그리고 교회 교구에서 1.94%를 수령했다. 국가에서 결정한 세율인하(2004년의 29%에서 2005년의 26%)를 보상하기 위해 2005년에 자치시의 몫이 증가했다(2004년의 19.75%에서 22.03%로). 각 자치시에 할당되는 금액은 기업이윤 및 해당 지자체 영역에서 운용되는 직원수에 따라 달라진다.

2. 교부금

국가로부터 수령한 교부금은 2005년에 지방공공부문 수입(82억 유로)의 27%에 달했다. 지자체는 법에 규정된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운영비 충당을 위해 교부금을 지원받는다. 즉, -사회복지 및 의료서비스 국가교부금(지방공공부문에서 2005년 수령한 국가교부금의 54%)은 사회인구 통계적 요인(연령구성, 실업률, 질병률 요인 등)에 따라 1인당 기준으로 결정된다; -교육 및 문화 국가교부금(국가교부금의 35%)은 학생수 및 교육관련 단위비용에 따라 1인당 기준으로 결정된다.

상기 교부금은 비록 구체적인 서비스에 대해 산출되긴 하나, 자치단체에서 원하는 대로 용도를 정할 수 있는 포괄교부금이다. 자치시는 또한 주민 수에 따라 배정되는 일반교부금(2005년에 국가교부금의 2%)을 수령한다. 자치단체의 지리적 상황(외딴 지역,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등)을 근거로 하여 교부금을 추가로 할당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자치시의 세수를 기준으로 하는 교부금 형평화제도(공통세원과 자체세원 모두)가 있다. 주민 1인당 국가평균 세수의 91.5%에 미달하는 세수를 가진 자치치는 보충지급 수혜자격이 부여된다. 반면에

2. 교회 교구는 법에 따라 조세권이 있다. 교회는 CIT(교회가 수행하는 사회적 책무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됨)의 몫과 아울러 교인소득(인구의 80% 이상)에 부과하는 교회세(kirkollisvero) 징수권이 있다.

91.5%를 초과하는 세수를 가진 자치시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줄이되, 삭감한도는 37% 이내로 한다.

기타 국가교부금(2005년 총 국가교부금의 9%) 중에 우선 중요한 것은 일시적 또는 예외적인 재정난에 처한 자치시 지원을 위한 재량적 재정지원, 그리고 합병을 결정한 자치시에 대한 합병교부금이 있다. 자치시는 또한 투자교부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는 특정 투자프로젝트에 책정해 두었다가 지자체 예산 및 프로젝트 재정프로그램을 검토한 후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3. 기타 수입

기타 수입은 2005년 77억 유로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방공공부문 수입의 25%에 해당한다. 이들 수입의 대부분은 지방 에너지, 수도, 하수처리시설, 항만의 사용료에서 나오는 지방서비스 요금이다. 지자체 서

비스에 대한 요금 부과 방식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데,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법에 따라 무상인 반면, 사회, 의료서비스의 경우는 법정한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IV 지방공공부문 부채와 차입

● 지자체는 차입에 관한 한 완전히 자유재량권을 가진다. 사전 허가나 승인을 일체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지자체가 국내 및 국제시장에서 제한 없이 채권발행으로 차입을 일으켜 어떠한 유형의 운용(자본지출과 운영지출, 부채 차환)에도 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차입금은 투자자금으로 사용된다.

핀란드의 지방공공부문 미지불채무는 2005년 현재 약 83억 유로(1인당 1,582 유로), 즉 국가 GDP의 5.3%로서 EU 평균(5.8%)을 약간 밑돈다.